

# 침몰선박 및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이상민·김정택

☐ 보고서 집필 내역

- ◆ 연구책임자  
-김정택 : 제6장
- ◆ 연구진  
-이상민 : 제1장 ~ 제5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 김찬규(경희대학교 교수)
- ◆ 박준호(유엔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 김선표(외교통상부 외교관)

## 머 리 말

2002년에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물선 인양에 관한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는 난파선 인양과 관련한 사업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울릉도 근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수송함 돈스코이호의 경우 50~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된 청나라 무역선 고승호의 경우 600톤 가량의 은괴가 실려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선박발굴과 관련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과거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연안에 침몰되어 방치되고 있는 1,400여 척의 선박 가운데 상당수가 귀중한 문화 유산이나 재화를 적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도 해양 강대국들은 해외에서 획득하거나 약탈한 금은보화를 자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천 척의 선박들이 해저에 침몰되는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다.

최근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연안에 침몰된 스페인 선박이나 하와이 공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소련의 핵잠수함 등 전 세계 해저에 산재한 난파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국제법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이해 집단의 다양한 관심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해에 난파된 선박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돈스코이호의 인양에 관하여 러시아 일부에서는 인양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에 대해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인양계획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올 경우 국내 현행법제상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해저유물처리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 발생 경향과 국내법적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예상되는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우리의 연안에 수장되어 있는 침몰된 선박을 비롯한 해저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원의 김정택 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이상민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양법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한 바가 컸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박춘호 유엔해양법재판소재판관, 김찬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선표 외교통상부 외교관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고서가 완성되도록 도움과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한 해양연구원 박성욱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2년 11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에 관한 국제법 개요	4
1. 개요	4
2. 유엔해양법협약	6
3. 해저유물보호협약	12
제3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	17
1. 국내 발굴사례	18
1) 신안해저유물 발굴 / 18	
2) 완도해저유물 발굴 / 19	
3) 군산 앞바다 해저유물 / 20	
4) 기타 해저유물 조사 / 20	
2. 국외 발굴 사례	21
1) 바사호의 인양 / 21	
2) 메리로우즈호의 인양 / 22	
3) 갈가호와 주노호 사건 / 23	
4) 타이타닉호의 발견 / 25	
5) 소련 핵잠수함 트레셔(U.S.S. Thresher)호 인양 / 26	
6) 나히모프호 사건 / 26	
7) 엘라배마호 인양사건 / 27	

- 8) 버크헤드호 사건 / 28  
9) 아토차호 사건 / 28  
10) 기타 / 28

## 제4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30

1. 국가 관할권 개요 31
  - 1) 관할권의 정의 및 범위 / 31
  - 2) 국가 관할권의 근거 / 32
  - 3) 국가 관할권의 경합 / 33
2. 국가면제 개요 33
  - 1) 국가면제의 의의 / 33
  - 2)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 34
  - 3) 국가면제의 범위 / 35
3. 해저유물의 관할권 36
  - 1) 해저유물의 정의 / 36
  - 2) 수역별 해저유물 관할권 / 37
  - 3) 시제별 해저유물 관할권 / 40
  - 4) 군함을 제외한 일반 상선과 화물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 43
  - 5) 침몰군함의 관할권 / 44

## 제5장 관련 국내법제 검토 ————— 53

1. 현행 법제 개요 53

- 1)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 53
- 2) 해난구조법(수난구조법) / 55
- 3) 문화재보호법 / 58
- 4) 유실물법 / 60
- 5) 공유수면관리법 / 61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2

- 1) 해저유물의 정의 부재 / 62



## 표 차 례

<표 2-1>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법 및 협약 발전연대기	5
<표 3-1> 해저매장물 발굴승인 현황	18
<표 3-2> 침몰된 선박 처리 사례	29
<표 4-1> 수역별 관할권 귀속	40
<표 4-2> 국별 문화유산법에 명기된 시제	42
<표 4-3> 해저유물에 적용되는 시제	42
<표 5-1> 해저유물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5
<표 6-1>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71



## <요 약>

###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문화유산이나 귀중한 재화를 적재한 채 침몰된 선박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
  -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저유물 탐사와 인양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난파된 재화의 인양은 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식됨
  - 국제적으로 난파선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법규정비가 미비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해저유물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이 연구는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과 관련된 국제적인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전 세계의 모든 해역을 그 범위로 함
  - 연구방법으로 유네스코의 다자간 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분쟁사례를 분석하며, 관련국내법 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제2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에 관한 국제법 개요

-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주로 다루어졌으

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유네스코가 논의의 중심기관으로 등장함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저유물과 관련된 내용은 제149조와 제303조 두 개 조항에 불과하며, 이들 조항은 해저유물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제149조는 해저유물에 관한 정의와 보존 및 처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정으로 구성됨
  - 제303조는 해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 및 역사적 유물보호를 위한 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유물보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의무를 각 국에 부여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
-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해저유물보호 규정 마련에 실패한 상황에서 해양대국들의 해저유물에 대한 관할권확대 시도를 염려한 세계국제법협회의 노력으로 1994년 해저유물보호협약초안이 마련됨
- 동협약초안은 1996년 유네스코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해저유물보호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기초로 채택됨
- 2001년 11월 유네스코총회에서 투표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된 협약을 해저유물보호협약으로 채택함
  - 세계국제법협회의 초안과는 달리 100년 이상 수중에 존재하지 않은 인간거주의 흔적은 제외하고 100년 이상 수중에 있는 것만을 해저유물로 정의함
  - 해저유물의 현지내 보존(*preservation in situ*)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상업적인 해저유물발굴을 금지함
  - 해저유물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나 파괴적인 방법의 탐사를 금지함
  - 연안수역과 접속수역 이원의 수역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대한 발견과 활동에 대한 보고, 고시, 위임의 필요성을 명시함
  - 이 밖에 국가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의 원칙, 해난구조법 및 유실물습득법과의 관계, 해저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유발의 필요성, 해

저유물활동과 관련한 부속규칙초안 마련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의 해저유물보호책임과 군함을 비롯한 국가선박 및 항공기의 처리와 관련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제3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사례

- 해저유적지는 침몰된 선박과 달리 주로 연안국의 영해에 위치하므로 그 처리에 있어 국제분쟁의 우려가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침몰된 선박 발견사례가 많지 않으며,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양업자나 국가에 의한 발굴이 일반적임
- 침몰된 선박은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양자간 합의에 의해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권리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판결을 따르는 경우가 있음
- 대표적인 침몰된 선박 처리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음

관광지로 개발	양자간 합의에 의한 처리
-메리로우즈호(영국) •1545년 7월에 침몰 •총 4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바사호(스웨덴) •1628년 처녀출항 중 침몰 •연간 7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버큰헤드호(영국) •1852년 남아프리카 해역에서 침몰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협정에 따라 군인묘지로 설정 •유품은 소유주 또는 후계자에게 인계 •발견자에게 보상 후 나머지는 양국정부가 균등하게 분배 -엘라배마호(미국) •1984년 프랑스해역에서 발견 •권리주장의 대립이 있었으나 협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설정

연안국에 유리한 사례	기국에 유리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토차호(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22년 플로리다 서남쪽에 침몰</li> <li>•피서에 의해 1971년에 발견</li> <li>•연방정부는 피서의 소유권을 인정</li> </ul> </li> <li>-U보트(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대전 중 침몰된 독일 잠수함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발견</li> <li>•노르웨이 정부는 독일의 암시적인 소유권포기를 인정</li> </ul> </li> <li>-핵잠수함(소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은 하와이 서북 공해상에 침몰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U.S.S. Thresher호의 인양을 시도</li> <li>•소련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li> <li>•명시적 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가호·주노호(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50년, 1802년 미국 버지니아주 해안에 침몰</li> <li>•버지니아주정부는 인양회사에 인양을 허가</li> <li>•연방항소법원은 소유권포기 증거의 불충분을 들어 스페인의 소유권을 인정</li> </ul> </li> <li>-타이타닉호(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12년 침몰</li> <li>•캐나다 대륙붕의 국제해역에서 발견</li> <li>•생존자와 타이타닉협회의 반대에 의해 미국측이 복원을 중지함</li> <li>•그러나 프랑스 인양업자와 RMS 타이타닉 회사에 의해 유물의 일부가 인양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음</li> </ul> </li> <li>-잠수함(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몰된 지 25년이 지난 독일 잠수함이 싱가포르에 인접한 국제해역에서 발견</li> <li>•싱가포르 법원은 독일의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li> </ul> </li> <li>-무역선(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0년 전 호주 해안가에 침몰</li> <li>•호주법원은 네덜란드의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li> </ul> </li> </ul>

## 제4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 침몰된 선박은 해저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난파한 지점에 따라 소유권 또는 관할권에 관한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음
- 연안국의 영해에서 발견되는 해저유물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별한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하여 접속수역에서의 연안국관할권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보장함

- 그러나 영해 및 접속수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발견되는 해저유물의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소유권 및 인양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함
  -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문제는 상반된 주장의 대립으로 유네스코 정부전문가협회에서는 관할권이 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연안국의 보호책임 강조 및 조정국제도를 만들어 타협함과 동시에 문제처리를 향후로 미룸
- 시제별 관할권문제는 해저유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고고학적’ 및 ‘역사적’ 이란 용어는 해석상의 문제를 유발하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비교적 최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해저유물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는 해양고고학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네스코협약은 100년 이하의 해저유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킴
- 선박은 법적인 지위에 따라 침몰된 후에도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군함은 일국의 무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으로 취급되므로 법적으로 불가침권과 주권면제의 특수한 지위를 누림
  - 그러나 침몰된 군함이 주권면제를 누리므로 다른 선박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침몰된 군함은 더 이상 군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군함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주권면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음
  - 또한 침몰된 군함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해양법, 해상법, 전시법 등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어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제외되어 왔음

## 제5장 국내법제 검토

-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발굴과 관련된 국내법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수난구조법’,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 ‘유실물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들 수 있음

-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가 아닌 물건이 국유의 토지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되므로 해저유물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그 적용을 위하여 해저유물 정의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연계가 필요함
  - 수난구호법은 조난사고에 따른 구조 및 침몰된 물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해저유물관련법규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저유물보호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은 전반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으로 매장문화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와 해저에 매장된 것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해저유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저유물에 대한 관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리적 범위와 그 예외에 대한 규정이 부재
  -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 및 그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매장물이 민법상 문화재에 해당하는 물건일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저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목적 상 해당 수면의 산업시설 관련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저유물관리 및 인양에 적용하기 어려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국내법은 해저유물보호를 위하여 성립된 단일법이 없이 여러 법이 중첩되어 적용됨으로써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도 부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념의 정의 및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저유물과 관련된 국제분쟁에 휩싸일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제6장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법제도 정비와 해저유물보호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유네스코협약 가입여부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

- 유네스코협약 비준 시 고려하여야할 점
  -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유물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 우리나라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
  - 국제분쟁 발생을 대비한 절차상의 고려
  - 협약발효 후 국내외적 대응방안 모색
  
- 국내법 정비방안
  -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해저유물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할 경우, 적용이 간편하고 법적용의 공백을 피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기존법의 목적과 상치되어 그 구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 문제가 지속됨
  -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단일법체계 하에 입법의 자유가 보장되며 국제협약에 따른 제정은 국제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 유네스코협약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수역적범위, 보호대상에 대한 물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구체적인 보호조치, 소유권의 귀속문제, 보상조항, 벌칙조항, 압수 및 처분,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중고고학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저유물의 조사 및 교육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육성방안 등임
  
-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 해저유물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가 육성과 재원확보
  - 육상문화재와 구별될 수 있는 해저유물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수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국내 일간신문 사회면<sup>1)</sup>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2000년 12월 4일: 95년 전 금괴를 운반하던 중 침몰된 러시아 수송함의 선체가 울릉도 근해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선체가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돈스코이호의 것일 경우 50조~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함께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동아건설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매장물발굴신청’을 내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해 돈스코이호의 발굴작업을 벌여 왔다.

2001년 4월 30일: 청일전쟁 당시 서해에 침몰된 것으로 알려진 청나라 보물선 ‘고승호’가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방 2km 해저 2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인양작업이 본격화된다. ...골드십측은 1894년 서해상에서 일본 해군에 의해 격침된 것으로 알려진 고승호에는 말발굽 형태의 은화 등 총 600톤 가량의 은괴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과거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연안에 침몰되어 방치되고 있는 선박 1,400여 척<sup>2)</sup> 가운데 상당수의 침몰된 선박이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재화를 적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가운데 돈스코이호와 고승호와 같이 최근 들어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또한 경제학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고선박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이들 고선박이나 해저 유물의 발굴과 관련한 문제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관심거리를 제공하였다.

---

1) 동아일보, 각 일자 사회면.

2) 동아일보, 서울경제 2000년 2월 22일자 정치면.



세계 제2차 대전 중 개발된 SCUBA(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기술은 천해에 산재한 거의 모든 난파물의 인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측방 감시용 수중탐지기(side-scan sonar) 등 첨단 수중탐지기술은 깊이에 관계없이 모든 해저유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침몰된 해저유물의 발굴과 인양을 가속시켰다. 특히 난파선에 선적되었던 재화를 인양하는 것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연안에 침몰된 스페인 난파선이나 하와이 공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소련 핵잠수함 등 전 세계 해저에 산재한 난파선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법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난파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이 서로 다른 관심을 나타내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변화해 가고 있다.

고승호와 돈스코이호의 경우도 비록 우리나라의 영해에 난파된 선박이지만 이들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내재해 있으며, 나아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고승호의 인양과 관련한 이해국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돈스코이호의 경우 발견 및 인양계획과 관련하여 러시아 일간 시보드나지<sup>3)</sup>는 자국이 돈스코이호 인양에 대한 일부 청구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에 관한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인양<sup>4)</sup>노력에 대해 국제법적인 대응을 해 올 경우, 침몰된 선박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미비한 우리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국내 현행법제상 러시아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이 내포하는 높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제적 분쟁에서의 패배는 국익의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저유물처리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발생 경향과 국내법적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산재한 해저유물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우리의 연안에 수장되어 있는 침몰된 선박을 비롯한 해저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3) 동아일보, 2000년 12월 8일 국제면.

4) 해저매장물발굴승인현황, 해양개발과, 인터넷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주소:[http:// www.momaf.go.kr/](http://www.momaf.go.kr/)>, 2002. 9. 16.: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에 의거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임.

국제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침몰된 선박에 관한 연구의 범위는 특정한 해역이나 수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반도 주변 수역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해저유물의 문화적·경제적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법규 마련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해저유물보호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 등과 같은 다자간 협약상의 관련 규정 및 입법연혁, 이 밖에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및 국제적인 양자 및 지역협정 체결의 현황과 관련사례 처리 관행을 주대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침몰된 선박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 세계 주요 해역에서 발생한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 인양 및 소유권 분쟁사례 조사·분석, 관련 국내법 현황, 국제분쟁 판결동향, 우리 국내법의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2장에서 침몰된 선박과 관련된 해저유물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개요와 내용에 관하여 소개하며,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실질 사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소재와 인양에 관하여 서술하며, 제5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 주변 수역의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에 관한 국제법 개요

해저에 흩어져 있는 난파선의 수가 세계적으로 삼백만 척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십이만여 척이 1824년과 1962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메이카의 포트로얄은 1692년 지진으로 인하여 수중으로 사라졌으며, 이 밖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대나 흑해의 신석기 유적 등 수없이 많은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sup>5)</sup> 이들 난파선과 해저유적은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다.

과거와 달리 심해저 탐험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인양한 유물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려는 인양업자에 의해 해저유적지는 과도한 약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이 귀중한 해저유물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기의식은 인류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법제의 도입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협의를 통하여 연구되거나 제정되어 진 해저유물보호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중요한 협약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개요

유엔해양법협약과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을 중심으로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법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5)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culture/legalprotection/water>) information kit.

<표 2-1>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법 및 협약 발전연대기**

연도	기 관	내 용
1956	유네스코	총회는 회원국 영해의 심해저 발굴수행에 관한 조항 <sup>6)</sup> 을 포함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적용을 위한 국제원칙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를 채택
1958	유엔	제1차 해양법협의회는 공해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High Sea) 등 4개의 협약을 채택
1970	유엔	총회는 심해저위원회(the Seabed Committee)의 협의를 따라 국가관할권 밖의 심해저와 거기에 있는 자원은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임 <sup>7)</sup> 을 선언하고 있는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Resolution 2749(XXV)))을 채택
1976	유럽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해저유물에 관한 법제연구를 수년간 진행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음
1982	유엔	제3차 해양법협의회는 1973년부터 여러 회기를 거쳐 해양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
1994	세계국제법협회	본회의는 문화유산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해저문화유산보호 협약초안을 채택하여 유네스코에 전달
1996	국제기념물 유적회 <sup>1</sup>	총회는 해저유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제선언문을 채택
1997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해저유물보호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수준에서 다루어져야한다” <sup>2)</sup> 고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전문가들을 소집하도록 유엔총장에게 요청
1998	유네스코	제1차 해저유물보호협약초안을 위한 정부전문가회의를 본부에서 개최
1999	유네스코	제2차 회의에서 협약초안의 총괄부분으로서 부록첨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이룸
2000	유네스코	개정초안 검토를 위한 제3차 회의개최.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이 완성되지 못함
2001	유네스코	제4차 해저유물보호협약초안을 위한 정부전문가회의 제2기에서 초안내용이 찬성 49, 반대 4, 기권 8로 승인됨 본회의는 찬성 87, 반대 4, 기권 15로 해저유물보호협약을 채택

6) 제1조 제1항: “..on the bed or in the sub-soil of the inland or territorial waters of a Member State.”

- 주 1) 국제기념물유적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2) 원문: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ould be regula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an international convention."

---

7) 제1조: "...the seabed and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as well as the resources of the area,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실질적인 해저유물의 중요성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지역적인 협의에서 논의되어오다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에 의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해양탐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발굴에 대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보호노력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협의되고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4년 해저문화유산보호협약초안이 세계국제법협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초안이 1996년 유네스코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이후 유네스코 회원국은 국제협약제정을 위하여 매년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유네스코 본회의는 2001년 11월 2일 몇몇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해저유물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 2. 유엔해양법협약

제3차 유엔해양법에 관한 회의에서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은 제149조와 제303조의 두 조항에서 해저유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33조 제2항은 24해리 접속수역 내의 특정 활동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고고학적 물건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국가 관할권 이원(以遠)의 해저지역(심해저)을 규율하고 있는 제11장 제136조<sup>8)</sup>에서 규정하고있는 ‘자원’은 1970년 유엔총회의 결의안 제2749호로 채택된 ‘심해저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sup>9)</sup>과 같이 광물자원에 한정된 표현이다. 그러므로 심해저와 그 자원개발을 목적

8) “심해저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The Area and its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9) 동 결의안에서는 심해저문화유산이 일반적인 ‘자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자원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3rd ed. 1966)로서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문화유산은 특수한 자원으로 규정되거나, 문화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초월한 문화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은 ‘채취되었을 경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천연상태의 자원(Black's Law Dictionary, 5th ed. 1979)’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으로 하는 해저지구<sup>10)</sup>로 하여금 심해저의 고고학적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안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141조는 “심해저는 이 장의 다른 규정을 해함이 없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차별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49조는 제141조에서 명시하고있는 규정중의 하나로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심해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 전체의 이익 특히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하여 보존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되고 ‘처리’되어야 할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존’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존방법에 대한 내용은 1973년 터키 제안서가 유일한 참조문헌으로 남아있다. 터키의 제안에 따르면 기원국이 해저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인양된 유물은 국제해저지구<sup>11)</sup>나 유엔의 박물관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표현된 문구는 수중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탐사를 정지시키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개발공사를 설계하거나, 혹은 처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하는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국제해저 지구는 고고학적 유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므로 심해저 유물보존 및 처리와 관련한 재정이 국제해저 지구에서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이 조항에 따라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격을 가진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물건의 발견을 위한 행위도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지 혹은 공해의 자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10) 1973년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의 고고학적 및 역사적 보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의 심해저위원회에 제출된 터키와 그리스의 제안서는 심해저 고고학적 유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법한 국제기구 창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제안과는 달리 해저 지구는 심해저와 그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11) 그리스와 터키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이 해저유물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저 지구의 관리·보호에 관한 규정설립을 요구하였으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채택되지 못하였다.

지 명확하지 않다.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정의를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sup>12)</sup>’로 규정하고 있는 1956년 유네스코의 권고에<sup>13)</sup> 따르면 발굴을 위한 탐사가 보존이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149조의 규정은 이러한 물건의 발견에 관련한 행위도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제143조에 나타나 있다. 즉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과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다.<sup>14)</sup>”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49조는 고고학적 물건의 탐사가 공해의 자유원칙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3부속서 제2조 (1)b는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 ... 그 이행에 관한 해저기구의 검증을 수락한다는 서면에 의한 만족할만한 보증을 해저기구가 받은 후에만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49조는 해저유물 관할권과 관련하여 세 분류의 권리 주창자를<sup>15)</sup>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권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발견된 수중유물의 권리에 대한 분쟁을 야기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난파선과 관련하여 선박의 기원국이 개별 선적화물의 기원국에 우선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의견<sup>16)</sup>에 따르면 ‘우선적 권리’는 “그 우선권의 작용에 반하는 다른 법적 권리가 존재함을 필수적으로 암시한다. 우선적으로 규정되는 연안국의 권리는 특정한 선행권을 의미하지만 동반되는 타국의 권리사멸(權利死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우선권 개념에서 암시하는 것은 서로간의 권리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한계를 정하기 위한 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sup>17)</sup>” 이상의 국제재판소의 이론적 설명을 제149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

12) 원문: “research aimed at the discovery of objects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such research involves digging of the ground, or systematic exploration of its surface or is carried out on the bed or in the subsoil of inland or territorial waters of a member State”.

13) ‘고고학적 발굴적용을 위한 국제원칙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4) 동협약 제143조.

15)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

16)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ement I.C.J. Rep.;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Judgement I.C.J. Rep.

17) 원문: “...necessarily implies the existence of other legal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at preference



선적 권리에 적용하면, 해저유물 인양국은 그 유물의 문화적 관련국과 유물에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한 협상을 필요로 한다.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에 대한 승인은 기원국과 문화유산과의 문화적·역사적 관련성에 기인한다. 즉 문화유산은 그 국가 문화유산의 일부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반환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the Return or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to the Countries of Origin)’에서는 해저에서 문화적·예술적인 보물인양을 추진중인 국가는 그 보물과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참여를 권유함<sup>18)</sup>으로써 우선적 관할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협상의 의무는 우선적 권리의 성격으로부터 유래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유엔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ing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의 원칙과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제149조의 우선적 권리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심해저의 분쟁처리를 위한 특별규정<sup>19)</sup>(1982 유엔해양법 협약 Part XI, Section 5)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sup>20)</sup>(Part XV)의 일반규정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에 따라 심해저 활동 관련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제187조에 따른 것이며, 심해저 고고학적 물건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심해저 활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제149조에서 의미하는 ‘기원국’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기술되었듯이 협약조항은 세 가지 부류의 관용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용표현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기원국과 구별되는 문화적 기원국의 정체는 무엇인가? 기원국과 문화적 기원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애매한 표현이 협약조항에 포함된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

opera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coastal State's rights as preferential implies a certain priority, but cannot imply the extinction of the concurrent rights of other States. ...it is implicit in the concept of preferential rights that negotiation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ine or delimit the extent of those lights.”

18) G.A. res. 48/15, 48 U.N. GAOR Supp. (No. 49) at 19, U.N. Doc. A/48/49 (1993). 원문: “7. Also invites Member States engaged in seeking the recovery of cultural and artistic treasures from the seab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facilitate by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the participation of States having a historical and cultural link with those treasures.”

19) Section 5. Articles 186-191.

20) Part XV. Settlement of Disputes. Sections 1-3, Articles 279-299.

성립되지 못하고 계쟁중이며, 제3차 해양법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령 기원의 자취를 밝히더라도 발굴유물과 관련한 권리 주창자가 복수일 경우에 더욱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원국에 관한 '정부간 문화유산반환 추진위원회(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the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의 정의<sup>21)</sup>를 적용할 경우, 제149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화적 기원국'과 '기원국'의 관계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동협약 제303조는 해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 및 역사적 유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각 국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약의 일반조항이나, 제149조와 같이 그 해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심해저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저유물 문제는 유엔해양법회의의 9차 회기(1980)의 제2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당시의 제안은 연구, 구조, 보호 및 보존의 목적에서 그 대륙붕 상 또는 해저에 있는 고고학 및 역사적 성격의 물건에 대하여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단 물건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이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제2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sup>22)</sup>

미국은 이어진 9차회기(1980)의 비공식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의 제안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격의 물건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해양환경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격의 어떠한 물건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 시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에게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sup>23)</sup> 라고 주장하였다. 속개된 회의에서 연안국에게 일반적인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이어 몇 가지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는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연안국에 의해 행사될 권리의 성격, 해난구조법 및 해사법과의 관계 등이다. 거리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는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한 데 반해, 미국은 24해리로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결

21) 발굴물이 문화적 전통과 연관된 국가(to whose cultural tradition the object is linked).

22) *UN Commentary*, Vol. IV, 303.2., p. 159.

23) GP/4 (1980, mimeo.) (U.S.A.). Reproduced in XII Platzoder 299., *UN Commentary*에서 재인용.

국 미국 안으로 타협되어 여러 차례의 수정 후 303조로 수용되었다.<sup>24)</sup>

제303조 제1항에는 해저유물에 관한 일반적이며 새로운 규정<sup>25)</sup>을 두어 연안국 관할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심해저를 제외한 모든 해저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가들의 역사적 유물보호 의무와 이를 위한 협력을 선언하였다. 제2항에서는 연안국의 승인 없이 24해리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반출한 유물은 밀수된 것으로 연안국이 추정<sup>26)</su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해저 이외의 해저문화재에 대한 의문은 1980년 제9차 회기 중에 제기되었다. 이때 제안된 내용은 연안국이 대륙붕상의 고고학적·역사적 성질의 물건에 대하여 연구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학적·고고학적 기원국은 이러한 물건에 대한 판매와 처분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덧붙여 제303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확인 가능한 소유주의 권리, 해난구조법 또는 기타 해상규칙 또는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및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 또는 역사적 유물의 보호에 관한 기타 국제협정 및 국제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 한다”<sup>27)</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03조는 제149조와 달리 ‘인류의 이익을 위한(for the benefit of mankind as a whole)’ 또는 국가의 ‘우선적 권리(the preferential rights of the state)’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질이 있는 물건(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objects)’이라는 문구에서 ‘역사적 성질’은 무엇을 말하고, ‘역사적 중요성’ 또는 ‘역사적 가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이러한 상이한 용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역사적 성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된 것이어야 하는가가 문제되며, 이에 대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협상에서 역사적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보다 더 오래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149조 및 제303조에 부가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3장은 난파선의 발견과 구조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해양과학조사’의 통상적인 의미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준비작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및 역사적

24) *UN Commentary*, Vol. IV, 303.3., p. 159.

25) 동협약 제303조 제1항.

26) 동협약 제303조 제2항.

27) 동협약 제303조 제4항.

물건의 해양영역 면에 대한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그러한 물건들은 연안국 또는 군도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종속된다. ②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연안국 영역 내에 연안국의 관세 또는 재정관련 법률과 규정의 침해가 있다고 추정될 때 이 지역의 해저에서 이러한 물건의 무허가 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그러한 물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없으며, 공해자유는 그러한 물건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④ 심해저에서 공해자유는 그러한 활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인류전체를 위해 그 물건의 보존 또는 처리할 의무를 지며, 특히 기원국 또는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하여 보존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 3. 해저유물보호협약

대부분의 국가는 3-12해리에 달하는 수역의 폭을 영해로 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당해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저유물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해를 벗어난 수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유산관련 활동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해저유물 보호의 효과적인 제도확충을 위한 두 개의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저문화유산에 관해서 상세한 조문을 두지 못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이외에 ‘유네스코문화재불법거래협약 (UNESCO Convention on Illegal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같은 문화재보호 관련 국제협약이 있었으나, 이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국 영토에 있는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해저유물에 관한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국제협약이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은 역사적 난파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할권을 영해 이원의 대륙붕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이에 비정부간 기구인 세계국제법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해저유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1988년

각 국의 학자, 공무원,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문화유산법률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Heritage Law)’를 결성하였다.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해양법 제 303조(4)가 해저유물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에 힘입어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연안국 영해 이원의 가치 있는 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 또는 유기된 해저유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소유권과 관계된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는 협약을 입안하여,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총회에서 전문 및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해저유물보호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이 확정되었다.

이 협약에서 해저유물은 ①고고학적 및 자연적 성격을 갖춘 유적지, 구조물, 건물, 조형물 및 인류의 유적, ② 선박, 항공기, 기타 수송수단 또는 이러한 수송수단의 부분, 선적 재화 또는 다른 내용물이 난파되거나 파괴된 것을 포함하여 수중에서의 모든 인간거주의 흔적들을 의미한다<sup>28)</sup>고 규정하고 있다. 해저유물 중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조사 또는 회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해당 기술발전 25년 이내에 문제의 소유주가 문화재의 조사 또는 복구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어떠한 조사 또는 복구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해저유물의 소유주에 의한 마지막 소유권 주장 이후로 적어도 50년이 경과했을 경우<sup>29)</sup>이다. 해저유물의 보호에 대한 이 협약의 범위는 실종 또는 유기된 해저유물로서 적어도 100년 이상 수중에 묻혀 있었던 유물에 적용된다. 협약가입국은 100년 이상이 되지 않은 해저유물도 보호할 수 있다<sup>30)</sup>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여하한 군함, 항공모함, 해상보조함 또는 한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당분간 오직 비상업적 목적으로 정부가 사용한 기타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이들의 내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31)</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사항은 상기 선박들과 관련된 조약 또는 소송과정을 통하여 표출된 해양대국들의 태도에 기인한 결정이다. 난파된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감독권이 타국의 관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강국들은 상기 선박들

28) 동협약초안 제1조 제1항.

29) 동협약초안 제1조 제2항.

30) 동협약초안 제2조 제1항.

31) 동협약초안 제2조 제2항.

에 대한 그들의 소유권과 관할권이 한 세기가 지나도 존속된 것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주장은 협약초안의 범주를 벗어나는 심각하고 복잡한 주권면제(主權免除)에 관한 논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협약 초안의 특징은 문화유산구역(Cultural Heritage Zone)의 설치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다루기 힘든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 심해저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유엔해양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sup>32)</sup>되어 있었지만 몇몇 국가들에 의해 문화유산에 대한 통제 관할권을 대륙붕까지 확장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 결과 통제권확장에 대한 선택적 포함을 공감한 위원회는 문화유산구역의 설치에 합의하게 되었다. 문화유산구역은 각 국 영해의 경계를 벗어나 국제법의 관련규칙과 원칙에 따라 정의된 대로 각 국 대륙붕의 외부경계선까지를 포괄한다.<sup>33)</sup> 협약 가입국은 문화유산구역을 지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른 국가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해저유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sup>34)</sup> 한편 선택적 문화유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심해저 운영을 위하여 다른 형태의 사법적 원칙이 필요하였다.

연안관할권행사에 있어 연안국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영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에 기인하여 협약초안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영해에서 해저유물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현장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sup>35)</sup>

유네스코 전문가위원회는 해저유물과 관련한 성문화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6년 만장일치로 이 초안을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기초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어서 1998년 4월 유네스코사무국과 유엔해양법과(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세계국제법협회초안과 매우 유사하였다.

해저유물보호협약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네스코 ‘정부전문가회의’는 1998년 제1차 회의를 가진 이후 매년 한번씩 열렸다. 2001년 제4차 회의에서는 2주간의 회의 결과 많은 논의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해저유물의 ‘현지내 보

32) 동협약 제149조 및 제303조.

33) 동협약초안 제1조 제3항.

34) 동협약초안 제5조 제1항.

35) 동협약초안 제7조.

존(preservation *in situ*)의 중요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또한 국가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의 원칙, 해난구조법 및 유실물습득법과의 관계, 해저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유발의 필요성, 해저유물활동과 관련한 부속 규칙초안 마련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의 해저유물 보호책임과 군함을 비롯한 국가선박과 항공기의 처리와 관련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형성에 만족하여야 했다.

제4차 회의 제2회기는 대륙붕 해저유물보호에 관한 문제와 국가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종교적인 중요성을 가지거나, 전쟁의 무덤과 같은 의미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호문제와 같은 다양한 민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해저유물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전문가 속개회의는 2001년 7월 2일부터 7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90여 유네스코 회원국이 참석하고, 미국, 팔레스타인, UN 산하 기구, NGO 등 옵서버가 참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해저유물보호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동초안은 의장이 부속서와 함께 전체를 총의로 합의, 총회에 상정하도록 제안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였지만, 러시아가 표결을 강하게 주장하여 회의는 표결을 거쳐 채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일본, 중국 등 49개 국가가 찬성하고, 러시아, 노르웨이, 터키,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반대하였으며,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칠레, 그리스 등 8개국이 기권하였다.<sup>36)</sup>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동 협약을 채택하였다.<sup>37)</sup>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은 전문, 35개조의 본문, 36개의 규칙이 규정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협약의 목적으로서의 해저유물이란 ① 고고학적 및 자연적 성격을 갖춘 유적지, 구조물, 건물, 인공물 및 인간유물, ② 선박, 항공기, 기타 수송수단이나 그것으로부터 여하한 부분, 그들의 적하나 기타 내용물, ③ 선사학적 성격의 유물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간

36) 표결 후 미국 및 터키, 노르웨이등 반대 국가들은 협약 초안 채택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협약 초안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발효될 경우에도 협약 당사국에게만 유효하며 비가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37) 투표 결과 찬성 87, 반대 4(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기권 15(우루과이, 브라질, 스웨덴,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등).

혈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한 100년 이상 수중에 위치해 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간존재의 모든 흔적을 의미한다<sup>38)</sup>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기간 중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에 의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해저유물의 현지 내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up>39)</sup>고 밝히고 있으며, 해저문화유산에 대해 행해지는 활동은 문화유산의 회수에 우선하여 비파괴적인 기술과 탐사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sup>40)</sup>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인 해저유물발굴을 금지<sup>41)</sup>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sup>42)</sup>를 제외하고 해저유물과 관련된 활동이 해난구조법과 발견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sup>43)</sup>고 밝히고 있다.

해저문화유산에 대한 활동으로 인하여 인간의 유물 혹은 신성시되는 유적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4)</sup> 또한 배타적경제수역, 연안국의 대륙붕 혹은 심해저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대한 발견과 활동은 특별한 체계의 보고, 고시, 위임이 필요함을 명시하며, 국가면제의 특권이 주어진 군함을 비롯한 국가선박이나 군항공기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취급을 마련할 것을 권고<sup>45)</sup>하고 있다. 해저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개발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요구<sup>46)</sup>하고 있다. 해저유물과 관련한 훈련, 기술이전 정보공유가 장려되어야 하며, 해저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증진되어야 한다<sup>47)</sup>고 밝히고 있다.

---

38) 동협약 제1조.

39) 동협약 제2조 5항; 부속서 규칙1.

40) 동협약 부속서 규칙4.

41) 동협약 제2조 7항; 부속서 규칙2.

42)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되었을 경우, 동협약과 완전히 일치는 경우, 해저유물 복원이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43) 동협약 제4조.

44) 동협약 규칙5.

45) 동협약 제9조~제13조.

46) 동협약 부속서 규칙 9~규칙 16.

47) 동협약 제19조~제21조.



## 제3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

우리나라 수역에서 수중유물과 관련된 신고가 1975년 이후에만 350여건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상을 통하여 접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이다.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가치 있는 유물을 선적한 많은 침몰된 선박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 수역이 동북아 3개국의 오래된 무역통로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공예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침몰된 선박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까지 승인된 해저매장물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울러 대부분의 유물이 서·남해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동해에 비해 수심이 깊지 않은 데다 유속이 빠르지 않으며 갯벌층이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어 각종 유물들이 수백년, 수천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 세계 수역에 침몰되어 흩어져 있는 선박의 수는 대략 삼백만 척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1500년도 이후에 북미해안에 침몰된 선박만도 약 6만 5천여 척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재난사전<sup>48)</sup>에 따르면 1824년에서 1962년까지 군함을 포함하여 전 해역에 침몰된 선박은 12,542척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침몰된 선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와 그 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처리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8) Charles Hocking, Dictionary of Disasters at Sea During the Age of Steam, Including Sailing Ships and Ships of War Lost in Action, 1824-1962, London, Lloyd's Register of Shipping 1969.

해저매장물 발굴승인 현황<sup>1)</sup>  
 <표 3-1>

승인기관	발굴 주변해역	발굴기간	발굴물 및 추정량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옹진군 덕적면 울도	01.2.1~03.1.31	선박(고승호), 은 375kg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울릉군 저동	99.10.5~04.12.31	선박(돈스코이호) 금괴류 500kg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군산시 옥도면 말도	99.9.15~02.8.27	금 10kg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99.9.15~02.9.14	금 5kg 은 15kg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군산시 옥도면 말도	01.9.15~02.9.14	금 6kg 은 28kg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군산시 옥도면 말도	01.9.7~02.9.1	금 10kg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01.6.13~02.6.12	금괴 30kg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대섬	01.5.1~01.12.30	보석(금괴등) 71kg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00.7.11~01.5.16	금괴 10kg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태안군 근흥면 마도 /서천군 마량리	99.12.29~00.12.28	금괴 10kg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대섬	00.5.1~00.10.30	보석(금괴등) 15kg
해군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대계 큰동섬	99.5.10~99.12.15	금괴 10kg

주 : 1)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자료, 2002년 9월 현재.

## 1. 국내 발굴사례

### 1) 신안해저유물 발굴

신안해저유물발굴은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첫 시도였으며, 수중 유물발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sup>49)</sup> 이 발굴은 1975년 5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

49) 황동환 · 김성필, 「수중유물발굴의 기초」, 해군사관학교, 1994.

축리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매병 등 6점의 도자기가 건져 올려진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조사는 1976년 10월부터 1984년 9월까지 9년 간 총 10차에 걸쳐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발굴조사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인양된 선체편은 그 당시 선체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발굴된 유물은 총 22,000여 점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고려청자 10여 점도 섞여 있었으나 대부분은 송·원대에 중국에서 제작된 유물들이었다. 이들 화물의 물표에는 일본 하주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선박이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적된다. 인양된 2만여 점의 유물은 당시 해상운송의 규모를 말해 주는 것은 물론 당시 동북아 3국의 교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sup>50)</sup>

특히 대량으로 출토된 도자기는 세계 수준 고고학 사상 유례없는 것으로서 편년과 생산지 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안선은 용골(龍骨, a keel)을 갖춘 뾰족한 바닥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격벽이 설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시의 조선기술을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신안해저발굴은 원대의 사회·경제상, 조선술, 국제교역사, 공예미술의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첫 장을 열게 한 해양 발굴로 기록되었다.

## 2) 완도해저유물 발굴

완도해저유물발굴조사는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청자 4점을 한 어부가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3년 12월과 1984년 3-5월에 걸쳐 고려시대 목선인 ‘완도선’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된 유물은 ‘완도선’을 비롯하여 고려청자 30,645점, 잡유류 26점, 토제유물 2점, 철제유물 18점, 목제유물 9점, 석제유물 1점 등이다. 배에 실린 도자기들은 실생활용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지방관청 및 관리, 사찰 등지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그릇으로 추정되며 배로 운송하다가 이곳에 좌초되어 침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발견된 고려시대 도자기들이 왕실 등에 제공되는 명기적인 성격을 가진 뛰어난 유물인데 비해, 완도해저 발굴유물에 포함된 청자는

50) 김용한, “우리나라의 수중고고학 활동”, 「해저유물의 보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1995.

실생활용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청자의 대부분은 해남군에 위치한 진산리 가마터에서 빚어진 녹청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도해저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질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고려도자기 연구에 있어서 11세기 후반 경의 도자기 양상과 제반 특징, 도자기의 수요와 공급과정, 도자기의 용도와 수요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완도선’의 인양은 우리나라 고대 선박을 연구하고 연안 항로를 규명하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아보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51)</sup>

### 3) 군산 앞바다 해저유물

2002년 4월 6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변산반도 북쪽 비안도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의 그물에 고려청자 243점이 걸려 올라 왔다. 문화재발견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수중탐사팀을 파견하여 고려청자 211점을 추가로 인양하였다.<sup>52)</sup>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양 유물들은 최근 조사된 전북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서 발굴된 고려청자와 유사한 형태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도요지에서 제작되어 인근 줄포항을 거쳐 해상을 통해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침몰되면서 해저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해 물살이 빨라져 퇴적층이 깎여 나가면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53)</sup>

이번에 발굴된 고려청자는 전성기로 진입하던 12세기 후반의 것으로 문양이나 형태 면에서 해저발굴 도자기 중 가장 양질이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온전한 것들이 많아 고려청자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4)</sup> 그러나 아직 배의 잔해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뿔층을 걷어내고 청자수습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잔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기타 해저유물 조사

신안 및 완도의 해저발굴조사 외에도 여러 차례의 해저유물조사가 수행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신고 또는 도굴사건과 관련된 매몰유물의 확인 탐사였으며,

51) *Ibid.*

52) 「연합뉴스」, 2002년 4월 24일; 「한국일보」, 2002년 4월 25일.

53) 「동아일보」, 2002년 4월 25일.

54) 「연합뉴스」, *Op. cit.*

본격적인 발굴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진도 통나무배의 발굴(1992년)과 목포 달리도 한선 발굴(1995년)을 통해 선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찾아냄으로서 큰 수확을 얻기도 했다.

충청남도 대천군 근해의 해양유물조사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마도, 신진도리, 납대지도, 장고도, 죽도 등지의 앞바다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40여점의 고려청자를 비롯한 많은 유물과 파편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시대 백자와 토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천 해저에서 인양된 청자는 12세기 전반에 등장한 상감기법이 주로 쓰였다. 외형상 정교하지 않고 거친 모습을 보인 인양 도자기들은 내외부에 「己巳」名이 새겨져 있어 13~14세기경의 고려 도자기로 추정된다. 대천 앞바다의 청자는 전남 부안, 강진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물로 청자상감국화문(己巳)명접시, 청자소완, 백자접시 등이 있으며 철제 솥도 한 점 있다. 현재 대천군 죽도 앞바다는 국가사적지(321호)로 지정되어 신안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와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문화재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중요시되고 있다.

## 2. 국외 발굴 사례

### 1) 바사호의 인양

스웨덴 바사왕조(1523-1818)의 구스타프 아돌프 2세의 지시에 의해 건조된 바사(Wasa)호는 1628년 8월 10일 5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진수식을 마친 후 처녀항해를 위하여 출발한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침몰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되었다.<sup>55)</sup> 바사호의 침몰은 고정되지 않은 채 선적되어 있던 64문의 대포가 선박의 중심을 무너뜨려 침몰되었다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체를 안정되게 지탱하여주는 용골의 무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후세의 연구에 의하면 11.4미터에 달하는 선체의 폭이 0.4 미터만 더 길었다면 침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55) 최몽룡, “세계 수중고고학의 발굴동향”, 해저유물의 보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1995.

약 50문의 포신을 인양한 1664년 발굴 이후 오랫동안 세인의 관심에서 잊혀져 있다가, 1956년에 앤더스 프란첸(Anders Franzen)에 의해 재발견되었다.<sup>56)</sup> 1957년 봄 바사위원회(WASA Committee)가 구성되어 선체의 인양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8월 인양이 시작되었는데, 가라앉은 선체에 줄을 걸고 그 줄을 수면 위의 부함에 연결시켜 끌어올렸다. 결국 바사호는 1961년 5월 4일 완전히 인양되어 부두로 옮겨졌다. 선체 내에서는 4,000개의 동전, 은화를 비롯한 10,000여점의 유물과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발견되었다.<sup>57)</sup> 인양이 된 후 수년에 걸친 보수작업을 거쳐 관광지로 보존되고 있는데 연간 7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바사호의 인양은 스웨덴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의 통치 하에 유럽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던 1628년 전후의 사회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그 당시 선박건조기술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빈약한 지식을 채워주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졌다. 또한 이 발굴 작업은 고고학자들 단독으로는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전문적인 작업으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유물의 기록이나 보존처리, 전시를 위한 특수댐의 축조, 선체의 보존처리 등 많은 과제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총 발굴비용이 1300만 달러가 들었으나 바사호는 수중 폼페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금세기 수중고고학에 있어서 최대의 성과로 일컬어진다.<sup>58)</sup>

## 2) 메리로우즈호의 인양

1509년과 1511년 사이에 건조되어 34년 동안 헨리 8세의 해군으로 봉사한 메리로우즈호는 1545년 7월 영국 남부 포트머스(Portsmouth) 외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 중 침몰되었다. 프랑스는 메리로우즈호가 그들의 대포에 의해 피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과적(過積)이나 항해 미숙이 침몰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침몰 후 발견된 메리로우즈호는 한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가, 1971년 맥키(Mckee)라는 전쟁 역사가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발견 후 7년이 지나 선박의 내부가 공개되었을 때 상당수의 선원유품과 선박비품

56) 이병철, 「발굴과 인양」, 서울, 1990.

57) 최몽룡, “세계 수중고고학의 발굴동향”, 「해저유물의 보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1995.

58) 황동환 · 김성필, 「수중유물발굴의 기초」, 해군사관학교, 1994.

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1979년 메리로우즈호의 인양을 위한 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회는 1982년 발굴을 결정하게 되었다. 메리로우즈의 인양으로 19,000점 이상의 문화유품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튜더(Tudor)왕조시대의 선박 설계 및 건조기술에 대한 지식과 영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물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sup>59)</sup>

1982년 인양될 때까지 2.8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개인후원자들의 지원과 자금마련 활동, 관광 수입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4.25백만의 관광객들이 인양된 메리로우즈호와 그 유품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갈가호와 주노호 사건<sup>60)</sup>

일찍이 바다로 진출하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스페인은 수세기 동안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수천 척의 선박들이 바다에 침몰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 동안 자국의 침몰된 선박에서 해저보물을 인양하는 사업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스페인은, 최근 들어 1750년과 1802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 해안에 침몰된 군함 갈가(La Galga)호와 주노(Juno)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침몰된 선박과 적재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sup>61)</sup>

이들 침몰된 선박에 대한 사건은 1996년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가 1987년 미국 연방하원이 제정한 ‘포기된 난파선법(Abandoned Shipwreck Act)’에 근거하여 Sea Hunt라는 인양회사에 해난구조와 해저유물인양을 허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sup>62)</sup> 그 후 Sea Hunt는 버지니아 해역을 탐사하여 34문의 대포를 탑재한 주노호와 50문의 대포를 선적한 갈가호의 잔해를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페인은 주노호와 갈가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이들 난파선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sup>63)</sup>하였다.

59) 이병철, 「발굴과 인양」, 1990.

60) 이석용,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의 법적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2), pp. 143-145

61) *New York Times*, July 31 2000.

62) 1987년 제정된 '포기된 난파선법(Abandoned Shipwreck Act)'에 따르면 해안에서 3해리 이내에 있는 모든 난파선들에 대해서 주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63) Paul Clancy, "Spain Assert Claim to Shipwrecks off Assateague, Latest Salvo in Virginia vs. U.S. Battle over Possible Treasure Ship", 참조<[http://www.prosea.org/article-juno\\_3-26-98.html](http://www.prosea.org/article-juno_3-26-98.html)>.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은 1902년 스페인과 체결한 ‘우호일반관계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General Relationship<sup>64)</sup>)’을 적용하여 주노호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갈가호는 버지니아주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000년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주권면제의 특권을 누리는 난파선에 대한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나, Sea Hunt사는 이 두 선박에 대한 스페인의 분명한 소유권포기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갈가호에 대한 1심 판결을 번복하여 갈가호와 주노호 모두 스페인의 소유라고 판결<sup>65)</sup>하였다.

1987년 제정된 ‘포기된 난파선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난파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려면, 난파선이 포기되었어야 하고, 아울러 그 난파선이 한 국가의 해저육지위에 존재하거나 묻혀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난파된 스페인의 두 선박이 버지니아주의 해저육지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스페인의 포기의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결은 스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심 지방법원에서는 스페인의 포기의사에 대한 증거를 7년 전쟁을 종결지은 1763년 ‘프랑스, 영국, 스페인간 강화조약(Definitive Treaty of Peace between France, Great Britain, and Spain)’에서 찾았다. 이 조약에 의해 스페인은 미국의 자국영토 대부분을 영국에 할양하게 되는데, 지방법원은 스페인의 영토할양에 관한 강화조약 제20조의 포괄적인 용어와 북미 식민지에 대한 완전한 주권변경을 고려할 때, 스페인이 갈가호와 잔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정<sup>66)</sup>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763년 조약 중 스페인이 미국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sup>67)</sup>이란 부근의 부속도서 같은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하면서 스페인이 침몰된 군함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sup>68)</sup>하였다.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는 후 영국은 외교 각서를 통하여 1763년 조약 제20조는 영토주권의 이양에 관한 것이므로 스페인의 갈가호 잔해에 대한 명백한 권리포기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미국은 이들 선박에 대한 스페

64)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 모두 명시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난파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65) *New York Times*, July 31 2000: 「한국일보」, 2000년 8월 1일.

66) 221 F.3d 634, 644; 2000 U.S. App. Lexis 17546, p. 21.

67) 상기한 국가와 영토에 의존하는 모든 것(everything that depends on the said countries and lands).

68) 221 F.3d 634, 644-645; 2000 U.S. App. Lexis 17546, pp. 21-26.



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1902년 양국간 조약과 일반국제관습법에 따른 자국의 의무라고 하였다.<sup>69)</sup>

#### 4) 타이타닉호의 발견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Titanic)호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처녀항해 중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 2시간 40분만에 침몰되어 2,228명중 1,523명의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세계 최대의 인명사고를 내었다.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해상인명안전(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 관한 국제회의'가 1913년 시작되었으며, 북대서양 항로에서 빙산에 대한 국제순시(International Ice Patrol)도 창설되었다.

타이타닉호는 침몰된 후 세인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1971년 미국 우즈홀(Woods Hole) 해양 연구소의 해양지질학자 발라드(Ballard)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 시도 되었으나 실패하였다. 1985년 6월, 미국 해군으로부터 22만 달러의 지원을 받은 발라드와 그의 팀은 알고(Argo)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380마일 지점에서 난파선을 발견하였는데, 이 지점은 국제협약에 의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수역이었다. 해저 4천 미터 아래를 녹화한 알고의 비디오 카메라에는 선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 1/2마일 떨어져 난파된 것으로 촬영되었다. 이듬해 발라드의 팀은 해군의 원격조종 잠수정 알빈(Alvin)을 이용하여 수천점의 유물을 촬영하였다.

발라드는 피해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타이타닉호의 즉각적인 복원과 유물의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생존자와 타이타닉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쳐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라드와 같이 발굴 작업에 참석했던 프랑스 팀은 RMS 타이타닉 회사의 조지 텔로치와 함께 잠수정을 이용하여 최초로 유물을 인양함으로써 국제관습법에 따라 타이타닉호의 인양권을 획득하였다. 그 후 이들은 수년에 걸친 인양작업으로 4,000여 점의 유물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모독하고, 고고학적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중요한 유적지와 유물들을 훼손하였다는 국제적인 맹비난

---

69) *New York Times*, July 31 2000. al 미국연방정부는 이 사건에서 스페인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침몰된 선박도 주권선박과 군모지로서 해저보물 인양사업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난파된 타이타닉호가 캐나다 대륙붕의 국제 해역에 놓여 있었으며, 그 잔해는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의해 연안국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자연자원이 아니며, 또한 난파선이 주권면제의 권한을 가지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결국 타이타닉호의 발견은 현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난파선의 관할권 및 인양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5) 소련 핵잠수함 트레셔(U.S.S. Thresher)호 인양

1974년 미국 CIA가 하와이 서북쪽 750마일의 공해 해저에 침몰된 소련의 핵잠수함 트레셔호의 선체 일부를 특별히 제작된 그로머익스플로어(Glomar Explorer)라는 심해저 샐비지션을 해양조사선박으로 위장하여 제니프 프로젝트(Project Jennifer)라는 암호명 하에 인양한 일이 있다. 침몰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잠수함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소련은 인양작업이 시작되자 즉각적인 항의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sup>70)</sup>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명시적 포기가 있는 침몰된 군함에 대해서만 인양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 6) 나히모프호 사건

러-일 전쟁 당시 만주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일본의 해상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발틱함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는데, 기지에 돌아가기 전 대마도 부근에서 있었던 일본 연합함대와 해전에서 이들은 완전히 괴멸되고 전쟁은 마침내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종결되었다.

당시 발틱함대에는 나히모프호(Admiral Nakhimov)라는 회계함(會計艦)이 있었는데 이 군함이 해전에서 격침되자 함대 사령관은 실려 있던 금붕, 은붕, 보석, 골동품 등 고가품을 돈스코이호에 옮겨 싣게 했지만 피격된 채 도주하던 돈스코이호 역시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됐다.

70) David J. Bederman, "Rethinking the Legal Status of Sunken Warship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1: 97-127, 2000.

1980년 일본해양개발이라는 일본의 한 샐비지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상기한 나히모프호의 선체를 찾아내 백금붕, 금붕 및 은붕의 일부를 회수한 일이 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당시 소련정부는 즉각 다음과 같은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국제법상 군함은 침몰된 것일지라도 선적국 이외의 그 어떤 나라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는 것, 포츠머스조약에도 침몰된 군함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따라서 당해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일본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인양을 허가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군함 및 적재된 소련 국유재산의 인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소련측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은 당해 선박이 나히모프호인지 확인된 바 없다는 것, 나히모프호는 침몰되기 전 일본해군에 나포되었으며 나포된 적군함과 적재된 재화가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포국에 귀속된다는 것은 해전법규상 확립된 규칙이라는 것, 따라서 이 군함에 대한 소련의 모든 권리는 나포와 더불어 소멸되었으며 포츠머스조약에 침몰된 군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긴장되자 회사측은 북방 4개 도서의 반환을 조건으로 무상인양을 제의했다. 그러나 소련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 7) 앨라배마호 인양사건

1984년 프랑스 잠수전문가들이 노르망디 해안 약 7해리 되는 곳에서 앨라배마(Alabama)호의 잔해를 찾아냈다. 이 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소속 군함이었는데 프랑스 근해에서 북군측 군함과 해전을 벌여 침몰된 것이었다.

발견 후 프랑스정부가 앨라배마호가 자국 영해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권리주장을 했으나 군함에 대한 권리는 당해 군함이 포획되거나 소속국이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는 미국측 반론에 밀려 자국 주장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 문제는 1989년 양국간 협정에 의해 배를 인양치 않고 보호구역을 정해 현상대로 유지하되 관리는 양국 대표로써 구성되는 과학위원회가 맡는다는 쪽으로 해결되었다.

## 8) 버큰헤드호 사건

1852년 2월 445명의 인원과 24만 파운드의 금화를 싣고 가던 영국군함 버큰헤드호(Birkenhead)가 케이프 콜로니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남아프리카의 한 선박회사가 배의 소재처를 밝혀냈는데 그 처리를 두고 양국 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배는 군모지로 하여 이를 존중한다는 것, 배에 실린 물품은 무상으로 소유주 또는 그 후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 금화는 남아프리카 정부와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지불을 한 후 나머지를 양국 정부간에 균등히 분배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 9) 아토차호 사건

1622년 허리케인을 만나 플로리다 서남쪽에 침몰된 스페인 범선 아토차호는 1971년 메일 피셔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가 이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6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물을 인양하자, 플로리다 주정부는 난파선의 해저자원이라는 명목으로 피셔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아토차호의 발견지점이 주정부 수역 밖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셔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스페인도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 10) 기타

-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침몰된지 25년이 경과하여 국제해역에서 발견된 독일 잠수함에 대하여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독일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근원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노르웨이 법원은 자국의 해난구조회사에 의해 발굴이 시도된 독일 잠수함 U-보트에 대해, 독일의 공식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국의 묵시적인 포기를 인정하였다.
- 네덜란드 정부는 250년 전 호주의 해안가에 침몰된 자국 무역선을 발견한 인양업자와 해난구조에 대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호주법원은 네덜란드에 의해 침몰된 선박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나, 인양업자는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국의 해군박물관에 기부하였다.

## 침몰된 선박 처리 사례

&lt;표 3-2&gt;

관광지로 개발	양자간 합의에 의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리로우즈호(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45년 7월에 침몰</li> <li>· 총 4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li> </ul> </li> <li>-바사호(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8년 처녀출항 중 침몰</li> <li>· 연간 7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큰헤드호(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52년 남아프리카 해역에서 침몰</li> <li>·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협정에 따라 군인묘지로 설정</li> <li>· 유품은 소유주 또는 후계자에게 인계</li> <li>· 발견자에게 보상 후 나머지는 양국정부가 균등하게 분배</li> </ul> </li> <li>-앨라배마호(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년 프랑스해역에서 발견</li> <li>· 권리주장의 대립이 있었으나 협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설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토차호(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2년 플로리다 서남쪽에 침몰</li> <li>· 피서에 의해 1971년에 발견</li> <li>· 연방정부는 피서의 소유권을 인정</li> </ul> </li> <li>-U보트(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대전 중 침몰된 독일 잠수함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발견</li> <li>·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의 암시적인 소유권포기를 인정</li> </ul> </li> <li>-핵잠수함(소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하와이 서북 공해상에 침몰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U.S.S. Thresher호의 인양을 시도</li> <li>· 소련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li> <li>· 명시적 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가호 · 주노호(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50년, 1802년 미국 버지니아주 해안에 침몰</li> <li>· 버지니아주정부는 인양회사에 인양을 허가</li> <li>· 연방항소법원은 소유권포기 증거의 불충분을 들어 스페인의 소유권을 인정</li> </ul> </li> <li>-타이타닉호(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년 침몰</li> <li>· 캐나다 대륙붕의 국제해역에서 발견</li> <li>· 생존자와 타이타닉협회의 반대에 의해 미국측이 복원을 중지함</li> <li>· 그러나 프랑스 인양업자와 RMS 타이타닉 회사에 의해 유물의 일부가 인양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음</li> </ul> </li> <li>-잠수함(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몰된 지 25년이 지난 독일 잠수함이 싱가포르에 인접한 국제해역에서 발견</li> <li>· 싱가포르 법원은 독일의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li> </ul> </li> <li>-무역선(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년 전 호주 해안가에 침몰</li> <li>· 호주법원은 네덜란드의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li> </ul> </li> </ul>

## 제4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해저유물로 간주되는 것에는 침식이나 지진으로 인해 물에 잠긴 거주 지역, 해수면의 변화로 침수된 선사유적지, 항해 중 난파한 침몰된 선박, 선박적재화물 등이 있다. 거주지역이나 선사유적지와 같은 침수지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한 나라의 법률에 지배를 받는 내수나 영해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리문제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국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보호와 보존에 대한 조사, 정보 및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침몰된 선박과 적재화물은 그 수가 매우 많아 발견되는 해저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장된 위치에 따라 선박의 원래 소유국인 기국과 선박이 침몰되어 있는 연안국이 상이할 경우 서로간의 소유권 혹은 관할권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침몰된 선박의 종류를 군함(국가에 의해 소유되었거나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통칭)과 그 밖의 일반상선으로 구분하여 다루는데, 그 이유는 두 종류의 선박이 가지는 법적인 지위가 상이하며, 침몰될 경우 이 지위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함은 전통국제법상 기국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타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군함의 이러한 주권면제의 법적 특권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침몰된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저에 있는 상당수의 군함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동안 침몰되었다. 이렇게 침몰된 대부분의 군함은 내수나 영해에 놓여져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해에 침몰된 군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영해에 난파된 침몰군함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연안국과 기국의 분쟁원인이 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있는 해저유물의 관할권을 다루기에 앞서 법적인 원리의 기초가 되는 국가관할권과 침몰군함의 법적 지위와 관련 있는 국가면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후, 침몰된 선박을 포함한 모든 해저유물의 관할권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 해저유물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법적 지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일반상선과 화물 및 유적지와 같은 해저유물, 그리고 군함으로 나누어 그 관할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국가 관할권 개요<sup>71)</sup>

### 1) 관할권의 정의 및 범위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란 한 국가가 사람·물건·사건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표현이나 발현형태이다. 관할권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sup>72)</sup>

입법관할권이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사법부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권능을 말한다.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을 통하여 제정된 법을 이용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 서류를 수집하며, 재판에 따른 결과를 수행하는 등 국가가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그 강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며 사법절차에 복종시키는 집행관할권이 있다. 그러므로 집행관할권은 다시 행정관할권과 재판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는 학자에 따라 영역내외적으로 무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영역 내에 일정한 효과를 유발시키는 영역 밖의 행위에까지 확대하는 역외입법관할권이 허용되기도 한다. 특히 형법분야에서 각 국은 역외관할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집행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즉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자국의 경찰과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파견하는 것은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토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71)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72)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 3rd ed., London Butterworths, 1993, p.370.

## 2) 국가 관할권의 근거

국가관할권의 주된 근거는 영토와 국적이며, 이와 함께 보호주의원칙, 수동적 속인주의원칙, 보편주의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관할권은 다양한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각 국의 중복된 관할권 주장으로 인해 국제적인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 (1) 속지주의(the territorial principle)

국가가 자국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리로 사안의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속지주의는 행위의 개시를 중심으로 하느냐 또는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순수 속지주의원칙(pure territoriality principle)과 객관적 속지주의원칙(objective territoriality principle)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행위의 결과가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그 국가 내에서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후자는 행위의 결과가 한 국가 내에서 완성되거나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끼쳐야만 관할권이 있다는 원칙으로 행위의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관계되거나 그 효과가 다수국에 걸치게 될 경우, 이들 나라 모두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 (2) 속인주의(the nationality or the active personality principle)

행위의 장소에 상관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리로 국적정의에 관한 분명하고 일률적인 규칙이 없을 경우 관할권 주장으로 인한 국가간의 갈등소지를 안고 있다.

### (3) 보호주의(the protective principle)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국의 중대법익 침해를 근거로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원리로, 국가의 안전, 영토의 보전 및 독립을 해치거나 공적 신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국은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리이다. 이 원칙은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와 달리 관할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징표가 없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큰 결점이 있다.



#### (4) 수동적 속인주의(the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해외에서의 자국민보호가 관할권행사의 기초로,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자의 국적국은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모호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보통 범죄가 아닌 특별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에만 한해서 인정된다.

#### (5) 보편주의(the universality principle)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대 다수국들의 유대의 발로에 의한 원리로,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 해적행위·전쟁범죄 등이 그 대상이 되며, 특정의 국제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의 조약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도 대상이 된다.

### 3) 국가 관할권의 경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할권의 기초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국가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원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주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사부재리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특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행위의 주체는 하나의 범죄로 여러 국가의 재판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2. 국가면제 개요<sup>73)</sup>

### 1) 국가면제의 의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 혹은 주권면제(sovrenign immunity)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sup>74)</sup>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면제는

73)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74)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제1조 및 제5조. 원문: “The present articles apply to the immunity of a State and its proper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another State.”, “A State enjoys immunity, in respect of itself and its proper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another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s.”

언제나 외국적 요소를 지닌 분쟁에서 제기되며, 타국의 집행관할권, 특히 사법절차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적·집행적 권한을 포함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면제란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인적 혹은 물적 측면에서 그 국가의 국가재판관할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에 흡결 또는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면제는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첫째, 군주를 포함한 국가원수는 국가를 대리하는 한 개의 기관으로 간주되므로 공적자격으로 행한 행위는 물론이고 임기 중 개인적인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완전한 면제의 대상이 된다.<sup>75)</sup> 둘째, 국가 자체와 중앙정부기관(the State and its various organs of government)<sup>76)</sup>이 되며, 셋째, 정치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s)과 국가의 대리기관 혹은 종속기관 및 기타 실체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of the State and other entities)도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면제의 대상이 된다.<sup>77)</sup> 넷째,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representatives of the State acting in that capacity)도 국가로 간주되어 국가면제의 특권을 누린다.<sup>78)</sup>

## 2)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국가면제는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다는 주권평등주의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이러한 법논리 이외에 상호주의 관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국에게 필요한 정치적이며 실제적인 고려사항들이 작용하고 있다.<sup>79)</sup> 즉 정부활동에 대해 상호우대를 해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거나, 외국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국가간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거나, 외국정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어내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등이 고려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75) ILC초안 제3조 2항. 원문: “The present articles are likewise without prejudice to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under international law to Heads of State *ratione personae*.”

76) ILC초안 제2조 1항(b)(i).

77) ILC초안 제2조 1항(b)(iii), (iv).

78) ILC초안 제2조 1항(b)(v).

79) Gamal Moursi Badr, *State Immunity: An Analytical and Prognostic View*, 1984, p75 p79.

### 3) 국가면제의 범위

면제 범위의 설정은 국가의 모든 행위와 모든 재산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면제이론(*absolute theory of immunity*)과 면제를 제한하는 제한적 면제이론(*limited or relative theory of immunity*)을 따른다.

절대적 면제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는 부동산 관련 소송과 국가 자신의 동의에 기초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와 재산에 대하여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정부는 행위의 성격과 목적이 상업적이며 비권력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 없이 타국에서 제소 당하지 않으며, 공공재산은 압류될 수 없으며, 국가선박은 나포·임검·소추될 수 없다.

한편 제한적 면제이론은 절대적 면제이론과 반대로 국가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즉 국가는 주권을 부여받은 한 개의 정치권력이면서 동시에 사적이고 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중인격자<sup>80)</sup>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재판소는 두 개의 모습 중에서 자국 정부가 어떤 모습 혹은 어떤 자격으로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그를 달리 대우하는 것처럼 외국에 대해서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행위를 주권적·권력적·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비주권적·비권력적·상업적·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일부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와 전통적인 절대적 면제이론을 벗어나 제한적 면제이론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다자간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다.<sup>81)</sup>

제한적 면제이론에 따를 경우 주권적·권력적·공법적 행위와 비주권적·비권력적·상업적·사법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행위의 목적, 의도 또는 동기(*purpose, intent or motive of the act*)와 성질(*nature of the act*)에 따른 구분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전자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의 상업적 행위가 권력적·공법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면

80) Gamal Moursi Badr, *Op. cit.*, pp23-24.

81) 제네바공해에 관한 협약(1958) 제9조와 유엔해양법협약 제96조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은 공해상의 기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의 관할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shall,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제를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 면제이론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sup>82)</sup> 대부분의 입법과 판례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행위의 성질을 선호하고 있다.

### 3. 해저유물의 관할권

#### 1) 해저유물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해저유물이란 문화유산의 일부로 수중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중’이란 해양과 내수를 모두 일컫는 광범위한 범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과 유네스코의 협약 혹은 제안서에 빈번히 인용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다.

해저유물에 대한 개념은 ‘유럽의회 제안서초안 848(Recommendation 848 of the Council of Europe 1978)’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1985년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초안(the 1985 Draft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역사적 성질의 물건(objects of an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nature found at sea)’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표현을 정의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물건을 구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한편 유네스코협약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한 100년 동안 수중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이 거주한 모든 흔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중문화유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협약에서의 특이한 점은 100년 이하의 중요한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문제는 포함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

82) Gamal Moursi Badr, *Op. cit.*, pp91-92.

## 2) 수역별 해저유물 관할권

연안국의 영해에서 발견되는 해저유물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1970년대 후반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해저유물에 대한 연안국과 기국, 그리고 원산지국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탐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영해 밖에 존재하는 해저유물의 발견이 가능해졌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1979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원산지국의 이익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으며, 해저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을 위한 유네스코회의에서도 러시아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sup>83)84)</sup>특히 1985년 타이타닉(Titanic)호 발견과 약탈사건을 계기로,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일반적 국제협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업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인양으로 해저유물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넓게 확산되어, 해난구조나 유실물과 관련한 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sup>85)</sup>네덜란드는 유럽평의회에 보낸 제안에서 침몰된 선박의 기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국에게 연안국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sup>86)</sup>하였으며, 덴마크는 국내법을 통해 해저유물에 대한 기국이나 원산지국의 이익을 승인<sup>87)</sup>하였다.

유네스코는 일찍부터 해저유물 관할에 관한 일반적이며 국제적인 규정마련에

83) Eke Boeston, "The UNESCO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p.7. [http://www.prosea.org/articles\(01-09-08\)](http://www.prosea.org/articles(01-09-08)).

84) 이석용,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의 법적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2), pp. 135-136.

85) UNESCO, "Treasure Hunters Beware", *UNESCO Courier*, Jul/Aug 98, Vol. 51 Issue 7/8, p61.; Patrick J. O'Keefe and James A. R. Nafziger,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5, 1994, p. 391-418. 타이타닉호 사건으로 심해저의 해저유물 보호를 위한 국제제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다. 1986년의 타이타닉기념법(R.M.S. Titanic Maritime Memorial Act)을 제정하여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장으로 하여금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 밖의 관심국들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대한 연구, 탐사, 인양작업 등에 대한 국제적 지침서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은 타이타닉호가 국제해양기념비로 남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제3국과의 협상을 국무장관에게 강제하게 되었다.

86) Anastasia Strati,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An Emerging Objective of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p 350-351.

87) 덴마크는 1963년 제정된 '역사적난파선보호법(Protection of Historic Shipwrecks Act)'에서 유물보관자는 인양된 난파선과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련 당국과 수중유물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Ibid., p.367.

고심하여 왔다. 일찍이 해저유적지에 대하여 ‘고고학적 발굴적용을 위한 국제원칙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를 제정하여, 국내 법률제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이 권고는 국가의 영해와 내수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럽의회는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초안(1978)’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었으나, 의회에 의해 채택되지 않으므로 해서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였다.

결국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해저유물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마련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2개조항의 삽입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조항 역시 접속수역 바깥부분에 위치한 해저유물의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소유권 및 인양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들 두 조항은 해저유물 처리에 관한 안내가 되지 못하며,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할 뿐이어서 조문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았다.

유엔해양법협약과 달리 해저문화유산보호협약은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심해저로 구분하여 해저유물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내에 위치한 해저문화유산에 대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을 규제하고 허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sup>88)</sup> 접속수역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대한 해양법협약 제303조 제2항의 입장을 계승하여 당사국들이 그 접속수역 내에서 해저문화유산에 대한 활동을 규제하고 허가할 수 있다<sup>89)</sup>고 규정하여 연안국들이 접속수역의 해저문화유산에 대하여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우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은 동규정에 따라 부여한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90)</sup> 즉, 해당 당사국은 배타적 경제수

88) 동협약 제7조 제1항, “당사국들은 그들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내 해저문화유산에 대한 활동을 규율하고 허가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89) 동협약 제8조, “이 협정 제9조와 제10조를 저해하지 않고 그에 덧붙여, 유엔해양법협약 제303조 제2항에 일치하도록 당사국은 그들의 접속수역 내의 해저유물에 대해 행해지는 활동을 인가하고 규제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규칙들이 적용되어질 것을 보장한다.”

90) 동협약 제10조 1항.

역 및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행사(광물 및 어업자원에 대한)에 대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권리를 가지며,<sup>91)</sup> 해당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저유물의 발견이 있거나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① 제9조 5항에서 해저유물에 대해 관심을 선언한 모든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고, ② 그러한 협의에 ‘조정국’으로서 조정하여야 한다<sup>92)</sup>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정국은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를 해함이 없이, 약탈을 포함한 해저유물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협약에 따라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며,<sup>93)</sup> ①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고, ② 합의된 조치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허가서를 발급하고, ③ 해저유물에 대한 필요한 기초조사를 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94)</sup> 이상과 같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있는 해저유물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문제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들 지역에서 관할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연안국의 보호책임 강조 및 조정국 제도를 만들어<sup>95)</sup> 타협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처리를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어 놓고 있다.

심해저에서의 해저유물발견과 관련활동에 대한 규정 역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생략한 채, 유엔해양법협약 제149조를 기반으로 하여 조정국 제도, 협의의 조정, 조치의 강구, 기초조사, 허가서 발급에 대해 규정<sup>96)</sup>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국제법상 해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역사적 유물의 관할권에 대하여 수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91) 동협약 제10조 2항.

92) 동협약 제10조 3항.

93) 동협약 제10조 4항.

94) 동협약 제10조 5항.

95) 2000년 Working Group 1 의장의 잠정제안(Article E: Consultations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에 의해 도입된 개념임 (WG1-NP3, Paris, 6 July 2000).

96) 동협약 제11조 ~ 제12조.

&lt;표 4-1&gt;

## 수역별 관할권 귀속

위 치	관할권 귀속	근 거
내수, 영해, 군도수역	연안국, 군도국의 배타적 권리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
접속수역(24해리)	해저로부터 수중유물의 불법적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음	유엔해양법 제303 조 및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
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	관련 이익 당사국간 협의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
심해저	해저유물과 관련된 활동에 공해의 자유가 적용되며, 이들 유산의 보존과 처분은 모 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져야하는 의무가 있고, 특히, 기원국, 문화적 기원 국, 또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기원국의 우 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하여 보존되고 처리되어야 함	유엔해양법 제149조 및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

## 3) 시제별 해저유물 관할권

시제별 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해저유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82년 해양법협약은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질이 있는 물건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objects)’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였다.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협약의 조항에서 표현하는 ‘고고학적’, ‘역사적’이란 용어의 해석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서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 움직이지 않는 문화유산이 ‘물건(objects)’이라고 표현된 용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의 해석은 해저유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 및 역사적 성질의 물건’에 대한 해석은 협의의 해석과 광의의 해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해석은 수백 년이 지난 품목들에 대한 보호를, 광의의 해석은 비교적 최근의 물건까지 포함한 보호를 의미한다. 1982년 해양법협약의 대략적인 체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문화유산 보호에 해당되는 물건을 100년 이상 수중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sup>97)</sup>1978년 유럽의회 제안서(Recommendation 848)와 같이, 해저유물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49조와 제303조의 목적은 해양탐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해저유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해저유물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문화유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화유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저유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며 모든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는 해양 고고학의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양과 보존을 인정하는 해석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해석상의 경향은 해양법협약 이외의 ‘고고학적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문화유산과 해저유물의 보호를 위한 각 국의 국내법상 시간적 정의가 표 3-2와 표 3-3<sup>98)</sup>에 나타나 있다. 국가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정해져 있다.

---

97) 제안서 848(1978) 부속서 ii. 원문: “Protection should cover all objects that have been beneath the water for more than 100 years, but with the possibility of discretionary exclusion of less important objects (or of less important antiquities) once they have been properly studied and recorded, and the inclusion of historically or artistically significant objects of more recent date.”

98) Anastasia Strati, "Deep seabed cultural property an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0, pp859-894, 1985. 재인용.

<표 4-2>                      **국별 문화유산법에 명기된 시제**

국 가	연 도	국 가	연 도
아르헨티나	1860	레바논	1700
바레인	1780	레소토	100년
벨리즈	150년	리비아	100년
볼리비아	1900	룩셈부르크	30년
브루나이	1894	마다가스카라	100년
캐나다	50년	말레이시아	1850
사이프러스	1850	몰타	50년
이집트	100년	네덜란드	50년
감비아	1937	나이지리아	1918
가나	1900	파키스탄	1857
지브롤터	1800	필리핀	100년
온두라스	1900	사우디아라비아	200년
홍콩	1600	스리랑카	1815
인디아	100년	수단	1821
인도네시아	50년	시리아	200년
이라크	200년	탄자니아	1863
아일랜드	100년	튀니지아	100년
이스라엘	1700	잠비아	1890
요르단	1700	아랍에미리트	150년
케냐	1895	미국	100년
쿠웨이트	40년		

<표 4-3>                      **해저유물에 적용되는 시제**

국 가	연 수	국 가	연 수
덴마크	100년 수중 <sup>1</sup>	노르웨이	100년
핀란드	100년	남아프리카	50년
뉴질랜드	60/100년 수중	스웨덴	100년 수중

주 1) 수중에서 100년이 지나야 함.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경향도 유네스코협약의 제정으로 인해 최소한 100년 이상 수중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 4) 군함을 제외한 일반 상선과 화물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일반 해저유물이란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협약’의 제1조 1(a)에 나타난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고학적 및 자연적 성격을 갖춘 유적지, 구조물, 건물, 조형물 및 인류의 유적, 선박, 항공기, 기타 수송수단 또는 이러한 수송수단의 부분, 선적 재화 또는 다른 내용물이 난파되거나 파괴된 것을 포함하여 수중에서의 모든 인간거주의 흔적들 또는 다른 내용물이 난파되거나 파괴된 것을 포함하여 수중에서의 모든 인간거주의 흔적들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1692년 지진으로 인해 수중으로 하강한 자메이카의 포트로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대를 포함한 고대문명유적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유적지는 연안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지배하는 내수나 영해에 위치해 있으므로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중요성을 가질 경우 그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유네스코협약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국의 영해에서 해저유물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현장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sup>99)</sup>

선박을 비롯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및 수송수단, 그리고 재화, 내용물 등은 일반적인 수송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은 유적지와 달리 국제수역을 넘나드는 이동성이 있으며 그 수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 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99) 동협약 제7조.

## 5) 침몰군함의 관할권

신해양법의 토론에 있어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있는 주제는 침몰된 선박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 국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침몰된 선박의 일부분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다 침몰된 군함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해양탐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난파선에 대한 발견과 인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년 간 난파선 소유권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침몰군함의 주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침몰군함처리에 관한 문제가 국제법 분쟁에서 등한시되고, 국제협약에서 제외되어온 이유는 이 문제가 국제해양법, 해상법, 전시법 등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고 있어 상당히 명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는 일반 수중유물과 상이한 군함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새로운 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협약의 전체적인 균형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 (1) 군함의 정의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표현된 것은 1907년 ‘상선의 군함으로의 변경에 관한 헤이그 제7협약(Hague Convention VII relating to the Conversion of Merchant Ships into War-Ships)<sup>100)</sup><sup>101)</sup>이다. 동 협약에서는 군함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100) 원문: “Article 1. A merchant ship converted into a war-ship cannot have the rights and duties accruing to such vessels unless it is placed under the direct authority, immediate control, and responsibility of the Power whose flag it flies. Art. 2. Merchant ships converted into war-ships must bear the external marks which distinguish the war-ships of their nationality. Art. 3. The commander must be in the service of the State and duly commissio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His name must figure on the list of the officers of the fighting fleet. Art. 4. The crew must be subject to military discipline. Art. 5. Every merchant ship converted into a war-ship must observe in its operations the laws and customs of war. Art. 6. A belligerent who converts a merchant ship into a war-ship must, as soon as possible, announce such conversion in the list of war-ships.”

101) 박성욱, “수중문화유산보호로서 침몰군함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2), p. 106.

- ① 선적국의 직접적인 관할·감독 및 책임 하에 있을 것(제1조)
- ② 군함의 외부표식을 할 것(제2조)
- ③ 그 국가의 군무에 복무하고 정식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성명이 군대의 장교명부에 기재된 지휘관이 있을 것(제3조)
- ④ 승무원이 군기에 복종할 것(제4조)
- ⑤ 그 행동에 있어서 전쟁법규와 관례를 준수할 것(제5조)
- ⑥ 그 변경사실을 군함표에 기입할 것(제6조)

헤이그협약에 이어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은 제8조 제2항에서 군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본 협약의 적용 상 군함이라 함은 일 국가의 해군부대에 속하는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군함임을 나타내는 외부표식을 달고,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고 또한 그 성명이 해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하에 있으며, 또한 정규해군기율을 따르는 사람을 승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sup>102)</sup>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서는 군함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즉

군함이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하며, 그 국가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식을 가지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아래 있으며 정규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sup>103)</sup>

그러나 이상과 같이 표현된 군함의 정의는 일반상선과 군함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는 현대적인 의미에 따른 분류인 관계로, 전쟁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 19

---

102) 동협약 제8조 2항.

103) 동협약 제29조.

세기 이전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성명이 해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하에 있어야한다’든지, ‘정규군대의 군율’과 같은 기준을 군함과 상선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의 선박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sup>104)</sup>는 것이다. 더구나 해양법 제29조의 조건을 1856년 파리선언 이전에 일반적으로 여겨졌던 사략선<sup>105)</sup>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sup>106)</sup>

그 결과 국제협의를 통하여 풀어야할 실질적인 문제는 식민지로부터 귀중품을 약탈하거나 채취하는데 이용되어지거나, 전쟁에 동원되어 물자를 수송하는 등 일시적인 전쟁관련 활동에 참여한 유럽해양국들의 선박의 지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의 무장 보물선이 해군장교의 통솔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함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들 선박이 무역과 수송 관련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상선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현대적 정의에 따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군함의 정의는 침몰군함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고려가 배제된 상태로서 국가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군함의 지위

군함은 한 국가의 무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이며, 이들 군함이 당해 국가에 있든지 외국의 영해나 공해에 있든 지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군함은 법적으로 불가침권과 주권면제를 통하여 특수한 지위를 누린다. 불가침권이란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하더라도 함장의 동의 없이는 함 내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불가침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범죄인의 비호권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군함은 보통범죄에 대한 비호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연안국은 범죄인의 인도 요청에 불응하는 군함에 대해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범조인에 대하여는 중대성과 위험성을 요건으로 비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07)</sup>

104) David J. Bederman, 2000, "Rethinking the Legal Status of Sunken Warship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97-125.

105) 전시에 적의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민간상선.

106) Jan Hendrik. W. Verzijl et a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Law of Maritime Prize*, Nova Et Vetera Iuris Gentium. Series A, Modern International Law, 1992, pp168-171.

107) 이한기, 「국제법강의」, 1995, 562-563.

주권면제는 관할권 즉, 체포, 구속 또는 모든 외국의 영역에서의 집행으로부터 면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공해에 있는 정부선박(政府船舶)은 그 기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sup>108)109)</sup>

군함은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선(公船)의 일종으로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며 아울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군함에 대한 본국의 관할권은 배타적이며, 군함에 대한 어떠한 간섭행위도 전투행위가 된다.<sup>110)111)</sup> 따라서 군함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것은 없지만 국제관습법상 군함에 대한 주권면제가 인정되어 온 이유도 군함이 군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면제에 관한 미국 최초의 판례는 1812년 ‘스쿠너익스체인지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선과 달리 무장공선의 입항을 인정하는 묵시적인 허가는 당해 영역국으로부터 면제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평시관계에 있는 외국의 군함에 대하여 국내법원의 관할권이 면제된다고 하며, 그 후 군함뿐만 아니라 공선을 포함한 외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사례가 되었다.<sup>112)</sup> 또한 1879년 ‘컨스

108)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해양법협약 제8조 제1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

109) 박성욱, “수중문화유산보호로서 침몰군함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2), 1999. p.108.

110) C. John Colombo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nd rev. ed., 1951.

111) 박성욱, *Op. cit.* p.109.

112) 이병조, 이증범, 「국제법 신강」, 일조각, 서울, 1997, 1012-1013쪽.; 이윤영, “Schooner Exchange호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제2호. 1970.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에서 문제의 선박은 원래 미국인 Mcfaddon의 것이었는데 나폴레옹전쟁 당시 프랑스의 대륙봉쇄선을 넘다가 프랑스해군에 나포되었다. 그 후 이 선박은 프랑스정부에 의하여 프랑스군함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이 선박이 미국의 한 항구에 입항하였다. 그러자 원소유주인 Mcfaddon은 자신의 선박이 국제법과 프랑스 국내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프랑스군함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소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미국과 프랑스는 평화관계에 있고, 이 선박이 프랑스의 군함자격으로 입항할 때 미국정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국정부가 문제의 선박을 프랑스 해국함대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프랑스 국가재산의 면제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John Marshall재판장은 “일국의 군주는 그 어떤 면에서도 다른 군주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최고 성질의 의무들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그 자신이나 자국의 주권적 권리들이 타국의 관할권 내에 놓이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는 오로지 명시적인 허가에 의해서나, 혹은 암묵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그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외국영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티튜션호사건'에서도 군함은 타국 영해 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국의 관할권에  
만 복종하며, 따라서 연안국은 타국 군함에 대한 소유권 회복의 소송,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해난구조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113)</sup>  
이 밖에 국제법위원회의 국가 및 국가재산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초안  
제19조에서는 '군사적 성격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의도된 재산'  
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집행에서 면제되는 특별범주로 지정하고 있다.<sup>114)</sup>

이상과 같이 국가 무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인 군함은 불가침권을 가지며 타국  
의 관할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침몰된 군함의 경우 과연 이러한 불가침권과 주권면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침몰된 군함과 항공기의 처리에 관한 문제  
는 유네스코회의 해저유물보호협약에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어서 그 지위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함과 군용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가나 사람들은 군함과 군용기가 침몰된  
후에도 주권면제를 누리므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침몰된 군함이나 항공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며, 또한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죽어간 군인들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의미에서 특수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침몰된 군함이나 항공기의 소유권은  
원소유국에 의한 명시적인 포기가 없이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sup>115)</sup>는 것이다.

---

있다"라고 언급하며, 절대적인 면제가 군주의 외국영토 내의 사적재산(private property)에  
는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기타 사적인 용무로 타국에 들어간 일반인  
(private individuals)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역을 위해 타국에 들어간 상선  
(merchant vessels)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113) 이한기, 「국제법강의」, 1995, p.563.

114)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제19조. 1(b). 원문: "The following categories, in particular, of property of a State  
shall not be considered as property specifically in use or intended for use by the State for other  
than government non-commercial purposes under paragraph 1 (c) of article 18: (a) property,  
including any bank account, which is used or intended for use for the purposes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State or its consular posts, special missions, miss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elegations to org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b) property of a military character or used or intended for use for military  
purposes; (c) property of the central bank or other monetary authority of the State; (d)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State or part of its archives and not placed or  
intended to be placed on sale; (e) property forming part of an exhibition of objects of scientific,  
cultural or historical interest and not placed or intended to be placed on sale."



침몰된 군함의 권리는 원래 소유주의 권리 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양강국들은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명백한 포기의 기준은 정해진 군함에 대한 소유권 폐기통고 및 철회 혹은 교전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포기의 기준’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규정은 1996년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 성명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오직 전시 침몰 전 포획이나 항복, 국제적인 합의, 명시적인 포기행위, 국제법과 기국법에 따른 국가에 의한 증여나 매매에 의해 소멸될 뿐이라고 하면서, 국가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sup>116)</sup>

물론 이런 경우에도 연안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침몰된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침몰되어 있는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한 접근권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아닌 기국 관할에 속하며 연안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sup>117)</sup>고 규정하고 있다.

침몰된 군함의 특수한 지위는 전시에 인정되어 교전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주권기국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이는 침몰된 국가선박이나 항공기를 그 위치나 전쟁묘역 여부에 관계없이 인양할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적대적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승무원들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는 침몰된 국가선박과 항공기는 전쟁묘지로 대우받아 기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제3장에서 소개된 ‘그로머익스플로어호 사건’은 한 국가가 공해에 침몰된 타국의 군함을 인양하려 했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sup>118)</sup>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115) J Ashley Roach, “Sunken Warships and Military Craft”, *Marine Policy*, vol. 20, No. 4, 1996, pp. 351-354.

116) J Ashley Roach, *Op. cit.*, pp. 352.

117) *Ibid.*

118) 실제로 1944년 말라카 해협에 침몰된 독일 잠수함 U-859로부터 수은 선적물이 다이버 그룹에 의해 국제수역에서 회수되어, 침몰된 선박과 선적 재화에 대한 독일의 소유권문제가 1972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고등법원은 선박과 화물의 소유권이 독일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률적인 정당성에 대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2001년 1월 20일 대통령 명의로 ‘침몰된 군함의 보호를 위한 미국정책성명(Statement on United States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Sunken Warships)’을 발표하여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sup>119)</sup> 이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양업자와 도굴범들이 해저에 침몰된 정부선박과 항공기에 접근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히며, 사전 동의 없이 침몰된 선박과 항공기를 인양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문제이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침몰된 국가선박과 항공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건이나 고고학적·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자칫 사람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커다란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화기나 연료와 같은 유해물질을 싣고 있을 수도 있다<sup>120)</sup>고 하였다.

한편 침몰된 군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원래 소유국에 의한 명시적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몰되어 더 이상 군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장교의 명령 아래에 있지 않고, 군사 활동 등의 당해 국가 역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군함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를 계속해서 적용하여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121)</sup>

Bederman교수는 침몰된 군함의 지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명시적인 포기가 있는 경우에만 침몰된 군함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정부의 실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1980년대까지 미국무성도 19세기 중반 이전에 침몰된 군함에 대해 묵시적 포기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침몰된 군함이나 주권선박을 다른 선박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미국법원의 관행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군함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포기 여부 판단의 기준은 선박이 침몰된 이후 경과한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로머익스플로어호 사건

119) 이석용,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의 법적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2), pp. 142.

120)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Vol. 37 Issue 3, Item Number: 4112694, 1/22/2001.

121) David J. Bederman, “Rethinking the Legal Status of Sunken Warship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Migliorino, “The Recovery of Sunken Warships in International Law”, in B. Vukas, (ed.), *Essays on the New Law of the Sea*, 1985, 2000.

의 경우와 같이 미국은 소련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련의 동의 없이 잠수함을 인양한 것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미국의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사실상 수많은 법원들은 지난 150년 동안 침몰된 선박의 소유권이 시간의 경과나 원소유자의 행위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국제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22)</sup>

이상과 같이 침몰된 군함의 지위판단에 관한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함의 기국과 침몰수역의 연안국이 상이할 경우 침몰된 군함의 소유권 문제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침몰된 선박에 대한 발굴승인은 돈스코이호와 고승호를 포함하여 총 12건으로, 그 가운데 10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인 상태<sup>123)</sup>이다. 발굴이 진행 중인 고승호와 돈스코이호의 경우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청나라와 제정러시아의 승계국으로 볼 때, 침몰된 선박에 대한 이들 나라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양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침몰된 선박 소유권에 대하여 국제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제정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돈스코이호는 침몰되기 전까지 국가면제 적용을 받는 군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몰된 돈스코이호의 법적지위에 관한 주장은 극명하게 대립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즉,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함의 특수성을 내세워 주권면제를 누리므로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원소유국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을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sup>124)</sup>과, **Bederman**교수의 주장<sup>125)</sup>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시적 포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국제관습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군함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침몰된 군함에 대한 특수한 지위 부여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해당사국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국제

122) *Ibid.*

123) 한국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maf.go.kr>; <표 5-1> 참고.

124) 러시아 일간 시보드냐지에 따르면 겐나디 멜코프 퇴역 해군 중령 겸 법학박사는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의 보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적법한 계승자로서 인양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물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000. 12. 8.

125) 본 고 제4장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관할권, 5. 침몰군함의 관할권, 3) 군함의 지위 참고.

적인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편 1975년 5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매병 등 6점의 유물이 건져 올려진 것을 계기로 시작된 신안보물선은 국제관습법상 연안국으로부터 관할권이 면제되는 군함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항해중인 상선 즉 일종의 무역선으로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관습에 의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은 연안국에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안보물선에 대한 정부의 발굴허가와 발굴업자에 의한 인양은 국제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5장 관련 국내법제 검토

### 1. 현행 법제 개요

현재 침몰된 선박 및 해저유물의 발굴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수난구호법',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 '유실물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해저유물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을 떠올릴 수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견물이 문화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문화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난구호법'은 조난사고를 당한 선박이 파손되어 침몰되었을 경우 이의 구조 및 침몰된 물건의 수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포기된 난파선법<sup>126)</sup>', '역사적 난파선법<sup>127)</sup>', '역사적 난파선보호법<sup>128)</sup>', '해저유물보호관리규정<sup>129)</sup>' 등을 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와 비교될 별도의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침몰된 선박 또는 해저유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sup>130)</sup>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1978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924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제5068호 '매장물자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제정된 후 4차에 걸친 개정을 거쳤다.

동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장물이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

126) 미국의 Abandoned Shipwreck Act, 1987년 제정.

127) 영국의 The Historical Shipwrecks Act, 1973년 제정.

128) 덴마크의 Protection of Historic Shipwrecks Act, 1963년 제정.

129) 중국의 Regulation on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n Underwater Relics, 1989년 제정.

130) 동규정 제1조.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sup>131)</sup> 즉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동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sup>132)</sup>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 기타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각각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sup>133)</sup>한다.

동규정은 승인의 배제에 대하여 관장기관이 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②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③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때, ④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배제하도록 규정<sup>134)</sup>하고 있다. 승인을 얻었더라도 관장기관은 ①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② 발굴자가 발굴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sup>135)</sup> 다시 10일 내에 작업연기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sup>136)</sup> ③ 발굴승인을 얻은 것 이외의 매장물을 발견하여 발굴승인을 따로 얻지 않고 발굴한 때,<sup>137)</sup> ④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⑤ 발굴자가 발굴 작업개시 보고<sup>138)</sup> 혹은 개시하지 못한 사유보고를 아니한 때<sup>139)</sup>나, 이종 물건 발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sup>140)</sup>, ⑥ 발굴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⑦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sup>141)</sup>하고 있다.

또한 국유매장물 보상에 관하여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

131) 동규정 제2조.

132) 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무처리지침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참조.

133) 동규정 제3조 제1항.

134) 동규정 제7조.

135) 동규정 제11조 제1항.

136) 동규정 제11조 제2항.

137) 동규정 제13조 제2항.

138) 동규정 제11조 제1항.

139) 동규정 제11조 제2항.

140) 동규정 제13조 제1항.

141) 동규정 제10조.

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매장물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매장물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sup>142)</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매장물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sup>143)</sup> 발굴 비용과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 그리고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발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sup>144)</sup>되어 있다.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될 경우 발굴자는 그 소유자에게 매장물을 반환<sup>145)</sup>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공서 게시판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제16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sup>146)</sup>

## 2) 해난구조법(수난구조법)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일반 해사법은 해저유물의 법적 지위와 처리를 둘러싼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난파선을 비롯한 해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해난구조와 유실물에 관한 기존의 법은 여러 이익집단과 주권국가간에 발생하는 초국경적 분쟁해결에 부적합한 것이 되었다.

일반 해사법은 역사적 유물에 대한 해난구조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커먼로에서 유실물에 관한 법은 영토에만 적용되고, 해난구조법은 연근해에는 적용되나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침몰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미의 해사법원은 커먼로의 유실물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난파선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난파선에 대한 소유권 획득에 필요한 조건인 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박에 대한 포기는 선박소유주에 의한 명시적인 소유권 포기 또는 주변상황을 고려한 추정에 의해 인정되나, 이러한 기준은 매우 부정확하고 주관적이다. 특히 단순

---

142) 동규정 제16조 제1항.

143) 동규정 제14조.

144) 동규정 제15조.

145) 동규정 제17조.

146) 동규정 제18조.

한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포기를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거의 해저보물 인양작업은 상업적인 경향을 대변해 온 전통적인 해난구조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양업자들은 상업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물을 분리·훼손하였다. 인양업자들의 무분별한 해저유물 발굴과 인양은 고고학자들은 물론 각 국 정부당국자들의 우려를 유발하여, 각 국은 해저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전통적인 해난구조법 규칙을 하나씩 수정해 가게 되었다. 현재는 먼저 발견하는 자가 물건의 임자가 되던 전통적인 해난구조법이 지배하던 시대로부터 해저유물의 보호를 위해 보다 보편적인 국내법·국제법이 지배하는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sup>147)</sup>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국내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침몰된 선박에 전통적인 해난구조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적지 않은 국가들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침몰된 선박에 해난구조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난구호법은 1994년 12월 22일 전문개정되어 1999년 4월 15일 까지 삼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동법은 7장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난사고에 따른 침몰품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5장 구호업무에서 동 침몰품의 인계와 인계된 물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sup>148)</sup>이다. 동법에서 말하는 수난구호는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과 구조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sup>149)</sup>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조난사고는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sup>150)</sup>를 의미한다.

147) James A. R. Nafziger, "Historic Salvage Law Revisite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2000.

148) 동법 제1조.

149) 동법 제2조 제1항.

150) 동법 제2조 제2항.



동법은 표류물과 침몰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표류물이란 점유상태에서 이탈되어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sup>151)</sup>을 말하며, 침몰품이란 이탈되어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sup>152)</sup>을 말한다. 이러한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할 경우, 습득자는 이를 곧바로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단 그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sup>153)</sup>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인계된 물건은 인도받은 시장·군수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sup>154)</sup> 그러나, 인계받은 물건이 ①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③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일 경우에는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sup>155)</sup> 이러한 공매 시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 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sup>156)</sup> 표류물 또는 침몰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손상하거나 지운 자 또는 새로운 기호를 표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sup>157)</sup>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령은 1995년 6월 16일 전문 개정되어 1999년 8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동 시행령은 표류물 또는 침몰품의 인계, 보관, 반환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은 시장·군수가 수난구호법에 의하여 보관 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sup>158)</sup>하였다. 수난구호법 상의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

---

151) 동법 제2조 제5항.

152) 동법 제2조 제6항.

153) 동법 제20조 제3항.

154) 동법 제22조 제1항.

155) 동법 제22조 제3항.

156) 동법 제22조 제4항.

157) 동법 제34조 제2항.

158)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다.<sup>159)</sup> 그러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경찰서·소방서 또는 선박출입항신고기관에 동 물건을 인도할 수 있으며,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즉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sup>160)</sup> 시장·군수는 인도된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sup>161)</sup>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sup>162)</sup>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액, 수령기한, 수령 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up>163)</sup>

### 3) 문화재보호법

이 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4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될 때까지 1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동 법은 해저유물 또는 해저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매장문화재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3장(제43조-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함)를 발견했을 경우,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sup>164)</sup> 하고 있다.<sup>165)</sup> 그리고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기본적으로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①연구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②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경우, ③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159)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160)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161) 동시행령 제30조 제3항.

162)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163) 동시행령 제32조 제2항.

164) 동법 제43조.

165)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sup>166)</sup>를 받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67)</sup>

국가도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으며<sup>168)</sup>,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69)</sup><sup>170)</sup>

발견된 문화재의 처리방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재청장이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고<sup>171)</sup>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sup>172)</sup>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sup>173)</sup><sup>174)</sup>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①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sup>175)</sup> 국가귀속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166) 동법 제44조 제1항.

167) 이러한 허가의 신청은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동시행령 제30조.

168) 동법 제45조 제1항.

169) 동법 제45조의 2.

170) 문화재청장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 제32조의 2.

171) 동법 제46조 제1항.

172) 동법 제46조 제2항.

173) 동법 제48조 제1항.

174) 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동법 제 47조 제1항), 위의 공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동법 제48조 제1항)

17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며,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76)</sup>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sup>177)</sup> 하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178)</sup>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sup>179)</sup>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함<sup>180)</sup>과 동시에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도록 하여<sup>181)</sup>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무를 새로이 신설하고 있다.

#### 4) 유실물법

유실물법은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7호로 제정되어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35호로 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총 16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즉시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습득물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습득물을 보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불편이 수반될

176) 동법 제48조 제2항.

177) 동법 제48조의 2 제1항.

178) 동법 제48조의 2 제2항.

179) 동법 제48조의 2 제3항.

180) 동법 제48조의 3.

181) 동법 제48조의 4.

때 또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 당해 경찰서장은 이를 매각할 수 있고, 그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고, 비용,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청구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매장물에 관하여는 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문화재의 국유)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본법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 5) 공유수면관리법

동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4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sup>182)</sup>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해 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 지역 안의 공유수면,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수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중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sup>183)</sup>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위한 조건은 ①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

182) 동법 제1조.

183) 동법 제4조.

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고 조성하는 행위,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⑧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⑨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sup>184)</sup>

그리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함<sup>185)</sup>으로써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제법상 침몰된 선박의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매우 피상적이고 저조한 상황에서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규정 또한 적용하기에 많은 흠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개별법들이 흩어져 있으며, 이들마저도 육상문화재와 해저유물의 상이한 점을 구별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해저유물의 정의 부재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해저유물 또는 해저유물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구별하고

---

184) 동법 제5조.

185) 동법 제7조.

있지 않고 있다. 즉 동법은 매장문화재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토지 및 해저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발굴 및 기타 제반사항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육상매장문화재와 해저유물을 같은 범주에서 규율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다른 법에서는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sup>186)</sup>, ‘점유를 이탈하여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sup>187)</sup> 등으로 정의된 물건이 해저유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해저유물 또는 해저유물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저유물 또는 해저유물의 정의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에 부합되는 제반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해저유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규정하기보다는, 이미 채택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 상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적인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세계협약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 2)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지리적 적용범위와 시제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선 지리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토지, 해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개념인 영토 및 영해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성립된 개념<sup>188)</sup>이며, 접속수역에서도 연안국의 권리가 상당히 인정되고 있다.<sup>189)</sup> 일부 국가는 이를 넘어서 그 적용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으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익을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86)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조.

187) 수난구호법, 제2조 제6항.

188) UNESCO 해저유물보호협약, 제7조.

189)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303조 제2항.

시제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 따를 경우 해저유물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100년 이상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시제적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 매장물과 해저유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규정으로서 일정한 시점을 초과하는 매장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매장물은 그때그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국내법은 해저유물보호를 위하여 성립된 단일법이 없이 여러 법이 중첩되어 적용됨으로써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도 부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념의 정의 및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해저유물과 관련된 국제분쟁에 휩싸일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 밖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로는 ① 수리에 있어서의 소유자부담원칙과 문화재 발굴·안전조치에 있어서의 공사시행자부담원칙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무리가 따르고 있으며, ② 불법문화재유통 금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③ 해저유물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매장물발굴이 필요한 경우 그 발굴이 허가되나, 필요한 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공사로 훼손우려가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에 드는 경비 역시 공사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sup>190)</sup> 이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유발하므로, 공사 시행자가 발굴하거나 보호해야할 문화재를 파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의 보조 내지 지원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190)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



## 해저유물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lt;표 5-1&gt;

구 분	체 제 및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적용</li> <li>-따라서 해저유물에 직접 적용되기 어려움</li> <li>-그러나 매장물의 문화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규정이 적용되어 발굴될 것이나, 그에 대한 문화재보호법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문화재와 구별되어 적용할 수 있는 해저유물의 명확한 정의 및 제반사항에 관한 규정 포함</li> </ul>
수난구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난사고에 따른 구조 및 침몰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li> <li>-규정하고 있는 표류물과 침몰품이 문화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목적 상 장래의 조난사고 발생 시 적용할 것이므로 해저유물은 제외된다고 할 것임</li> <li>-그러나 관련 정의에서 수중문화재를 명백히 배제한다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은바, 시제적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적·시제적 적용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포함</li> </ul>
문화재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으로, 3장에서 매장문화재에 관하여 규정함</li> <li>-매장문화재는 토지와 해저에 매장된 것을 공히 다루고 있으므로, 수중문화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함</li> <li>-해저유물 관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리적 범위와 그 예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의 보조 필요</li> </ul>
유실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실물의 소유권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li> <li>-매장물이 민법 상 문화재에 해당하는 물건일 경우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육상문화재와 해저유물은 그 성격이 달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 법에서도 존재하게 됨</li> </ul>	
공유수면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수면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li> <li>-목적 상 해당수면의 산업시설 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유물 관리 및 인양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움</li> <li>-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수면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면으로 분류하므로 해저유물과 관련된 해상행위가 이 법 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한 지, 적용이 배제될지의 문제가 제기됨</li> </ul>	

## 제6장 해저유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저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크게 법제도의 정비와 해저유물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는 2001년 11월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해저유물보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 결정과 이에 따른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입법을 통해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중장기 보호방안의 설립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의 국내비준문제와 국내법 정비에 있어 예상되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해저유물보호협약 가입문제

국내법 정비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 대한 국내비준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1년 7월의 정부전문가회의에서 동협약초안의 총회 상정문제에 관한 표결시 찬성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1월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협약 채택에 찬성한 바가 있다. 정부는 2002년 초부터 동협약의 국내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약의 국내비준은 동협약에 구속되겠다는 최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동 협약이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유물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며,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동남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해저유물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해저유물보호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서도 유네스코협약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규범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유물 발굴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연안에

매장된 해저유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원인 유물뿐만 아니라 외국이 기원인 유물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협약은 유물의 발굴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협약의 기준은 한국 연안의 해저유물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네스코협약의 기준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저유물 보호를 위한 국내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만약 동협약을 비준할 경우 이는 여타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국내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협약이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으나 소유권 문제, 침몰군함 문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법의 입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유네스코협약의 기준을 통하여 해저유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 기회에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협약은 해저유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며, 제1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절차를 선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영토, 내수면, 영해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동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동협약의 발효 이후 국내외적 대응방안 모색이다. 유네스코협약은 발효 후 격년으로 당사국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국내법에 대한 정비 방안

이미 파악된 바와 같이 현행 국내법규는 해저유물보호와 관련하여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적용할 만한 적절한 내용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이 발효될 경우 동협약에서 요

구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조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국의 입법사례와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1) 기존의 국내법 개정

우선, 국내법에 대한 정비방안으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정으로부터 해저유물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마련된 틀 안에서 해저유물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간편하다고 하겠다. 또한 현행 법률의 지속적인 적용을 피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 별도의 입법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입법조사 등 연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존의 법을 개정한다면, 개정된 내용이 기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상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조가 무너질 우려도 제기되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의 수준까지 대폭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는 법제도상의 간결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인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 2)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는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단일의 법체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저유물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

로 국익만을 고려할 경우 관련 협약을 비준한 국가와의 분쟁 시 발생할 외교적 비용과 정치적인 부담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협약이 국제 관습법화될 경우 관련 국내법규는 또다시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입법을 한다면 해저유물의 보호 및 개발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변 이해당사국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분쟁상대국이 국제협약의 비가입국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내법 정비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동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에 있어서도 기존법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해저유물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국익 향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협약에서 나타난 국제적 기준이 반영된 국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경우, 새로이 제정되는 국내법에는 수역적 적용범위, 보호대상에 대한 물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구체적인 보호조치, 소유권의 귀속문제, 보상조항, 벌칙조항, 압수 및 처분,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중고고학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저유물의 조사 및 교육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수역적 범위에 있어서,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심해저의 4단계로 구분하여 해저유물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영해 내에서는 연안국이 해저유물 관련활동의 규제 및 허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군함 등의 국가선박의 경우에는 기국 및 관련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접속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해저유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은 동협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는 한 허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연안국은 해당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저유물에 대한 활동을 금지 또는 허가할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현행 국내법이, 이러한 국제적 규범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네스코협약상의 수역적 범위에 대하여 흠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유네스코협약의 규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정될 동법의 적용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해양선진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변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예를 보면, 1989년에 제정된 ‘해저유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내수, 영해, 기타 중국이 관할권을 갖는 모든 수역 내의 역사적 난파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영해 내의 모든 해저유물과 중국 관할권 내의 수역에서 발견된 중국 또는 그 국적을 알 수 없는 국가에서 기원한 해저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sup>191)</sup> 즉 중국은 현재까지 연안국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sup>192)</sup>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익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입법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적 또는 시제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유네스코협약에 따르면 100년 이상 된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해저유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새로이 제정되는 국내법에 있어 매장물과 해저유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저매장물의 발굴도중 문화재적 성격의 물건이 발굴되는 경우 매장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화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행 발굴승인이 발굴단계에만 이루어지던 것을 발굴대상 매장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단계와 발굴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1) Hoge Zhao, “Recent Developments in the Legal Protection of Historic Shipwrecks in Chin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 1992, pp. 323-325.

192)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에 대해서 중국도 찬성하였으므로 중국이 동 협약 가입에 따라 국내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3.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 1)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재원확보

해저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저유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전문가집단으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관, 해군사관학교의 해저유물 발굴단 정도가 있지만 해저유물보호에 따르는 기술적인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해저유물에 초점을 둔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즉 해양고고학, 인류학, 보존처리 등 해저유물과 관련된 학문의 수요를 파악하여 고등교과과정을 신설하는 등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부분의 정부예산 즉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1999년 문화재청 승격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정부예산 점유율이 0.27%에 불과하여 정부의 투자순위가 매우 낮으며 절대액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6-1>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단위 : 억원

연도	62	70	80	90	95	99	2000	2001	2002
금액	1	19	109	367	734	1,390	2,558	2,725	2,994

자료: 문화재청.

#### 2) 해저유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 의하면 “해저유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193)</sup>라고 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대로서 그 국가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육상의 문화재

193) 동협약 제20조.

보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물론 해저유물에 대한 논의가 최근의 일로 활발해지긴 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시킨 현재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보호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의 직제상 해저유물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매장문화재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청의 직제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해저유물보호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다른 당사국과 국제협력이나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상에는 이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유물의 조사와 교육뿐만 아니라 해저유물의 목록작성, 유지 및 갱신, 해저유물의 효과적인 보호, 보존, 발표 및 관리를 위한 소관기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또 기존의 기관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히 개선<sup>194)</sup>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통보<sup>195)</sup>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이 해저유물관련 소관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경우 육지의 문화유산보호에도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저유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협약 가입을 전후하여 문화재청의 직제에 해저유물을 처리하는 독립과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물론 1999년 5월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후 매장문화재과가 2002년 3월에 신설되었지만 동과는 육상중심의 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저유물보호를 위해서는 독립과의 신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제개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02년에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도 해저유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발굴전문기관의 특성화에 해저유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저유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해저유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향후 수년 이내에 유네스코 해저유물보호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때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장기 비전(2002-2011년)을 제시한 동기본계획에 해저유물에 대한 적절한

---

194) 동협약 제22조 제1항.

195) 동협약 제22조 제2항.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세부 실천계획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적절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수립

상기한 바와 같이 2002년에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해저유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저유물보호협약에 가입하고 동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장기 실천계획 중에는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국내입법의 정비와 함께 해저유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묵시적 포기에 대한 사례와 입법분석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해저유물보호협약에 가입하기에 앞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수립과 함께 중장기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 김용한, “우리나라의 수중고고학 활동”, 「해저유물의 보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1995.
- 김찬규, “침몰군함의 인양과 국제법”, 「국제법평론」, 2000-II, 2000.
- 박성욱, “수중문화유산보호로서 침몰군함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4(2), 1999.
- , “수중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7(1), 2002.
-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 이병조 · 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 이병철, 「발굴과 인양」, 1990.
- 이석용, “해저문화유산과 침몰군함의 법적지위”, 「국제법학회논총」, 46(2), 2001.
- 이영준 · 박성욱, “수중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입법논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3(1), 1998.
- 이윤영, “Schooner Exchange호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15(2), 1970.
-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 최몽룡, “세계 수중고고학의 발굴동향”, 「해저유물의 보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정책자료집」, 제1권, 1995.
- 황동환 · 김성필, 「수중유물발굴의 기초」, 해군사관학교, 1994.

### 〈외국문헌〉

- Badr, Gamal Moursi, *State Immunity: An Analytical and Prognostic View*, 1984.

- Bederman, David J., "Rethinking the Legal Status of Sunken Warship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1, 2000.
- Boeston, Eke, "The UNESCO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ttp://www.prosea.org/articles\(01-09-08\)](http://www.prosea.org/articles(01-09-08)).
- Clancy, Paul, "Spain Assert Claim to Shipwrecks off Assateague, Latest Salvo in Virginia vs. U.S. Battle over Possible Treasure Ship", [http://www.prosea.org/article-juno\\_3-26-98.html](http://www.prosea.org/article-juno_3-26-98.html).
- Colombos, C. Joh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nd rev. ed., 1951.
- ICJ,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ement I.C.J.Rep.*
- ICJ,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Merits", *Judgement I.C.J. Rep.*
- G.A. res. 48/15, 48 U.N. GAOR Supp. (No. 49) at 19, U.N. Doc. A/48/49 (1993). GP/4 (1980, mimeo.) (U.S.A.). Reproduced in XII Platzoder 299., UN Commentary.
- Hocking, Charles, *Dictionary of Disasters at Sea During the Age of Steam, Including Sailing Ships and Ships of War Lost in Action, 1824-1962*, London, Lloyd's Register of Shipping 1969.
- Migliorino, Luigi, "The Recovery of Sunken Warships in International Law", in B. Vukas, (ed.), *Essays on the New Law of the Sea*, 1985.
- Nafziger, James A. R., "Historic Salvage Law Revisite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2000.
- O'Keefe, Patrick J. and James A. R. Nafziger,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5, 1994.
- Roach, J. Ashley, "Sunken Warships and Military Craft", *Marine Policy*, Vol. 20, No. 4, 1996.
- Strati, Anastasia, "Deep Seabed Cultural Property an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40, 1985.
- Strati, Anastasia,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An Emerging Objective of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1995.
- UN Commentary, Vol. IV, 303.2., 1982.

- UNESCO, "Treasure Hunters Beware", *UNESCO Courier*, Vol. 51 Issue 7/8, Jul/Aug 1998.
- Verzijl, Jan Hendrik. W. et a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Law of Maritime Prize*, Nova Et Vetera Iuris Gentium. Series A, Modern International Law, 1992.
-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Vol. 37 Issue 3, Item Number: 4112694, 1/22/2001.
- Whish, Richard, *Competition Law*, 3rd ed., London Butterworths, 1993.
- Zhao, Hogue, "Recent Developments in the Legal Protection of Historic Shipwrecks in Chin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 1992.

**UNESCO**  
**Paris, 2 November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부록: 해저유물보호협약**

- 전문 35개 조문, 부속서(규칙 36개)로 구성 -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5 October to 3 November 2001, at its 31st session,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a particularly important element in the history of peoples, nat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concerning their common heritag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at responsibility therefor rests with all States,

Noting growing public interest in and public appreci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the protection

- 2001년 10월 15일-11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 제31차 총회는

-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불가분의 일부이며 특히 민족과 국가역사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공동유산과 관련한 상호관계로서 해저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그러한 해저유물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과 그 책임이 모든 국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 해저유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대중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 해저유물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조사, 정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and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inced of the public's right to enjoy the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enefits of responsible non-intrusive access to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of the value of public education to contribute to awareness, appreciation and protection of that heritage,

Aware of the fact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threatened by unauthorized activities directed at it, and of the need for stronger measures to prevent such activities,

Conscious of the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legitimate activities that may incidentally affect it,

Deeply concern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 exploit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in particular by certain activities aimed at the sale, acquisition or barter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ware of the availability of advanced technology that enhances discovery

- 원장소의 해저유물에 책임있는 비침투적 접근으로서 교육적 및 오락적 이익을 향유할 대중의 권리와 그 유산에 대한 의식(awareness), 인식 그리고 보호에 공헌하는 공적교육의 가치를 자각하고,

- 해저유물이 그에 초점이 맞춰진 허가되지 않은 활동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사실과 그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해저유물에 대한 적법한 활동이 해저유물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 해저유물에 대한 상업적 탐사의 증가, 특히 해저유물을 판매, 취득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한 특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 첨단기술의 효율성은 해저유물의 발견과 해저유물에 접근을

of and access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elieving that cooperation among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cientific institution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chaeologists, divers,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at large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at survey, excavation and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necessitate the availability and application of special scientific methods and the use of suitable techniques and equipment as well a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all of which indicate a need for uniform governing criteria,

Realizing the need to codify and progressively develop ru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including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4 November 1970,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향상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전문 조직, 고고학자, 잠수사, 기타 이익 당사자 그리고 일반대중간의 협력이 해저유물의 보호에 필수적임을 믿으며,

-해저유물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는 특별한 과학적 방법의 이용과 적용, 적절한 기술 및 장비의 사용과 함께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규율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1970. 11. 14.)과 세계문화·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UNESCO 협약(1972. 11. 16.) 및 유엔해양법협약(1982. 12. 10.)을 포함한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저유물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성문화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깨닫고,

and Natural Heritage of 16 November 1972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Commit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for the preservation in situ or, if necessary for scientific or protective purposes, the careful recove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ving decided at its twenty-ni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second day of November 2001 this Convention.

##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a)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ll traces of human existence having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character which have been partially or totally under water, periodically or continuously, for at least 100 years such as:

(i) sites, structures, buildings, artefacts and human remains, together with their

- 해저유물의 원장소 보존이나, 만일 과학적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저유물의 신중한 회수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념하며,

- 이 문제는 국제협약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UNESCO 제29차 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 이 협약을 2001년 11월 2일 채택한다.

##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은:

1. (a) “해저유물”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 100년 간 수중에 위치해 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간존재의 모든 흔적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i) 유적지, 구조물, 건축물, 인공물 및 인류유물과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



- |  |   |
|--|---|
| archaeological and natural context;  | 적, 자연적인 배경; 그리고   |
| (ii) vessels, aircraft, other vehicles or any part thereof, their cargo or other contents, together with their archaeological and natural context; and   | (ii) 선박, 항공기, 기타 수송 수단이나 그것으로부터의 여하한 부분, 그들의 적하나 기타 내용물들과 함께 그들이 갖는 고고학적, 자연적 배경                      |
| (iii) objects of prehistoric character.  | (iii) 선사학적 성격의 유물들  |
| (b) Pipelines and cables placed on the seab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b)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은 해저 유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 (c) Installations other than pipelines and cables, placed on the seabed and still in use, shall not be considered a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c) 해저에 놓인 도관 및 전선 이외의 시설물로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저유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 2. (a) States Parties means States which have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Convention and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 2. (a)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기속받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중인 국가를 말한다.  |
| (b) This Conven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os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6, paragraph 2(b), which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nd to that extent States Parties refers to those territories. | (b) 이 협약은 제27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영토로서 당해 호에서 확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영토에 준용되며, 그 범위내에서 “당사국”은 그 영토를 포함한다. |
| 3. UNESCO mean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 3. “UNESCO”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위원회를 의미한다.   |

Organization.

4. Director-General means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5. Area means the seabed and ocean floor and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6.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ctivities hav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their primary object and which may, directly or indirectly, physically disturb or otherwise dam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7. Activities incidentally 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eans activities which, despite not hav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their primary object or one of their objects, may physically disturb or otherwise dam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8. State vessels and aircraft means warships, and other vessels or aircraft that were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at the time of sinking, only for government non- commercial purposes, that are identified as such and that meet the defin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4. “사무총장”이란 UNESCO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5. “심해저”란 국가 관할권의 한계 이외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한다.

6.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이란 해저유물을 일차적 목적으로 해저유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간섭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7. “해저유물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란 해저유물을 일차적 목적으로 또는 목적의 하나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저유물을 물리적으로 간섭하거나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8. “국가선박 및 항공기”는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거나 운용된 군함 및 기타 선박들 또는 항공기로서 침몰시점에 비상업적 목적의 정부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해저유물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9. Rules means the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referred to in Article 33 of this Convention.

## **Article 2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1. This Convention aims to ensure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3. States Parties shall preserv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States Parties shall, individually or jointly as appropriate,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with international law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sing for this purpose 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5. The preservation in situ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considered as the first option before allowing or engaging

9.“규칙서”는 이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것으로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과 관련한 규칙서를 의미한다.

## **제2조 목적과 일반원칙**

1. 이 협약은 해저유물의 보호를 보장하여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국들은 해저유물의 보호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이 협약 규정과 일치하여 해저유물을 인류이익을 위해 보존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해저유물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이 협약과 국제법과 일치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국들의 결정 및 능력에 따라 최상의 실행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해저유물의 원장소 보존은 동 유산에 초점이 맞춰진 여하한 활동을 허가하거나 종사하기 전에 최우선 선택으

in any activities directed at this heritage.

6. Recover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deposited, conserved and managed in a manner that ensures its long-term preservation.

7.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commercially exploited.

8. Consistent with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modify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State practice pertaining to sovereign immunities, nor any States rights with respect to its State vessels and aircraft.

9.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roper respect is given to all human remains located in maritime waters.

10. Responsible non-intrusive access to observe or document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encouraged to create public awareness, appre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heritage except where such access is incompatible with its protection and management.

로 간주되어야 한다.

6. 회수된 해저유물은 장기 보존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탁,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7. 해저유물은 상업적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8. 국가관행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부합하여, 이 협약의 어느 것도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과 국가관행 또는 국가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여하한 국가의 권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9. 당사국들은 해역에 위치한 모든 인골에 적절한 존중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0. 원장소의 해저유물을 관찰 또는 기록을 위해 책임있는 비침투적 접근은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그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인식 및 보호의 창출을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

11. No act or activity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is Convention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claiming, contending or disputing any claim to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Article 3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context of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4 Relationship to law of salvage and law of finds**

Any activity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law of salvage or law of finds, unless it:

(a) is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11. 이 협약을 기초로 하여 수행한 어떠한 행위 또는 활동도 국가 주권 또는 관할권에 대한 여하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다투거나 또는 논쟁하는 근거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그 어느 것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국가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전후관계와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 해난구조법과 발견물법과의 관계**

이 협약이 적용하는 해저유물과 관련한 여하한 활동은

(a)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b) is in full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c) ensures that any recover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chieves its maximum protection.

(b) 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그리고

(c) 해저유물의 여하한 회수가 동 유산의 최대한 보호를 달성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해난구조법 또는 발견물법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Article 5 Activities incidentally  
C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use 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its disposal to prevent or mitigate any adverse effects that might arise from activities under its jurisdiction incidentally affect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rticle 6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1.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ter into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or develop existing agreements, for the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ll such agreements shall be in full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not dilute its universal character. States may, in such agreements, adopt rules and regulations

**제5조 해저유물에 부수적 영향을 미  
치는 활동**

각 당사국은 그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에서 해저유물에 부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하한 역효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각 당사국의 결정에 있어 최상의 실행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양자, 지역 또는 기타 다자간  
협정**

1. 당사국들은 해저유물의 보존을 위해 양자, 지역 및 기타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거나 기존 협정을 발전시키도록 권장된다. 그런 모든 협정들은 이 협약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이 협약의 보편적 성격을 희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들은 그런 협정에 있어 이 협약에서 채택한 것보다 해저유물의 더 나은 보호를 보장

which would ensure better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n those adopted in this Convention.

2. The Parties to such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may invite States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to join such agreements.

3. This Convention shall not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unken vessels, arising from other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concluded before its adoption, and, in particular, those that are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7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1. States Parties,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have the exclusive right to regulate and authoriz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ir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하는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그런 양자, 지역 또는 기타 다자간 협정의 참가국들은 당해 유물과 관련된 입증 가능한 관련 국가 특히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인 관련 국가들을 그러한 협정에 동참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침몰선의 보호에 관하여 이 협약 채택 이전에 체결된 특히, 이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의 해저유물**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규제 및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Without prejudice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tates Parties shall require that the Rules be applied to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ir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3. Within their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and in recognition of general practice among States, States Parties, with a view to cooperating on the best methods of protecting State vessels and aircraft, should inform the flag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if applicable, other States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with respect to the discovery of such identifiable State vessels and aircraft.

#### **Article 8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iguous zone**

Without prejudice to and in addition to Articles 9 and 10,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3, paragraph 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ates Parties may regulate and authorize

2. 당사국들은 해저유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규칙 및 기타 국제협정을 해함이 없이 자국의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관한 규칙서가 적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자국의 군도수역과 영해 내에서 자국의 주권 행사와 국가들 간의 일반적 관행을 승인함에 있어서 국가선박과 항공기를 보호할 최상의 방법에 관해 협력 한다는 관점으로 이 협약의 당사국인 기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확인 가능한 국가선박과 항공기의 발견에 대해 입증 가능한 다른 관련국가 특히, 문화적, 역사적인 또는 고고학적인 관련국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접속수역의 해저유물**

제9조 및 제10조를 해함이 없이 또한 제9조 및 제10조에 부가하여,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30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자국의 접속수역 내에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ithin their contiguous zone. In so doing, they shall require that the Rules be applied.

**Article 9 Reporting and notifica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1. All States Par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ccordingly:

(a) a State Party shall require that when its national, or a vessel flying its flag, discovers or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its continental shelf, the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b)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Party:

(i) States Parties shall require the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규제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 국가들은 규칙서가 적용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서의 보고 및 통보**

1. 모든 당사국들은 이 협약과 일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는 해저유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a) 일 당사국은 자국 국민 또는 자국 기를 게양한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종사하려 하거나 해저유물을 발견했을 때, 그 국민 또는 선장에게 그러한 해저유물의 발견 또는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b) 타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i) 당사국들은 국민 또는 선장이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자국)과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them and to that other State Party;

(ii) alternatively, a State Party shall require the national or master of the vessel to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and shall ensure the rapid and effective transmission of such reports to all other States Parties.

2. O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shall declare the manner in which reports will be transmitted under paragraph 1(b) of this Article.

3. A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discoveries or activities reported to it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any information notified to him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Any State Party may declare to the State Party in whos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whose continental shel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its interest in being consulted on how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uch

타 당사국(연안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 대안으로, 일 당사국은 그 국민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자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모든 타 당사국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를 기탁할 때, 일 당사국은 이 조 제1항 (b)호에 따른 보고의 전달 방법을 선언하여야 한다.

3. 일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당국에 보고된 발견 또는 활동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신에게 통보된 여하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여하한 당사국은 해저유물이 소재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당사국에게 그 해저유물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협의할 이익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그 해저유물과 입증 가능한 관련성을 가진 특히, 문화적, 역사적

declaration shall be based on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 Article 10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1. No authorization shall be granted for an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excep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A State Party in whos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whose continental shel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has the right to prohibit or authorize any activity directed at such heritage to prevent interference with it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 Where there is a discove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r it is intended that activity shall be directed at underwater

또는 고고학적인 관련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10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에서의 해저유물보호

1. 이 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대해 어떠한 허가도 부여할 수 없다.

2. 해저유물이 일 당사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국가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에 대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산에 초점이 맞춰진 여하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3. 일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저유물

cultural heritage in a State Party's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its continental shelf, that State Party shall:

(a) consult all other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9, paragraph 5, on how best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 coordinate such consultations as Coordinating State, unless it expressly declares that it does not wish to do so, in which case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9, paragraph 5, shall appoint a Coordinating State.

4. Without prejudice to the duty of all States Parties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y way of all practicabl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looting, the Coordinating State may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and/or issue any necessary authorization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if necessary prior to consultations, to prevent any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ether arising from human activities or any other cause, including looting. In taking such measures

의 발견이 있을 때, 그 당사국은:

(a)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저유물의 최상의 보호방법에 관해 이익을 선언한 모든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b) 그러한 협의에 조정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에 “조정국”으로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한 경우,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익을 선언한 국가들은 하나의 조정국을 지명하여야 한다.

4. 해저유물을 보호할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를 해함이 없이, 약탈을 포함한 해저유물에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정국은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한 이 협약과 일치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 이전에 약탈을 포함한 인간 활동 또는 여하한 다른 원인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해저유물에 여하한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여하한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당사국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assistance may be requested from other States Parties.

#### 5. The Coordinating State:

(a) shall implement measures of protection which have been agreed by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mplement those measures;

(b)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for such agreed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ssue those authorizations;

(c) may conduct any necessary preliminary research on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therefor,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Director- General of the results, who in turn will make such information promptly available to other States Parties.

6. In coordinating consultations, taking measures,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and/or issuing authoriz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ct on behalf of the States Parties as a

#### 5. 조정국은:

(a)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에 한한다; 그리고

(b) 규칙서와 일치하는 그러한 합의된 조치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에 한한다.

(c) 해저유물에 대한 여하한 필요 기초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정보가 다른 당사국들로 하여금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이 조에 따라 협의의 조정, 조치의 강구, 기초조사의 수행 그리고/또는 허가서 발급에 있어서, 조정국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당사국 전체를 대표하여 행하여야 한다. 여하한 그러한

whole and not in its own interest. Any such action shall not in itself constitute a basis for the assertion of any preferential or jurisdictional rights not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no activity directed at State vessels and aircraft shall be conduct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flag State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Coordinating State.

#### **Article 11 Reporting and notification in the Area**

1. States Par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Article 14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ccordingly when a national, or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 State Party, discovers or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Area, that State Party shall require its national, o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report such discovery or activity to it.

행위 자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하한 우선적 권리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

7. 이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국의 합의와 조정국의 협조 없이 국가선박 및 항공기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행해질 수 없다.

#### **제11조 심해저에서의 보고 및 통보**

1. 당사국들은 이 협약 및 유엔해양법 협약 제149조와 일치하여 심해저의 해저유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 당사국의 국민 또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심해저에 위치한 해저유물을 발견하거나 또는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때, 그 당사국은 자국 국민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견 또는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States Parties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of such discoveries or activities reported to them.

3. The Director-General sha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all States Parties any such information supplied by States Parties.

4. Any State Party may declare to the Director-General its interest in being consulted on how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uch declaration shall be based on a verifiable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particular regard being paid to the preferential rights of States of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origin.

#### **Article 12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1. No authorization shall be granted for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the Area excep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 당사국은 보고 받은 발견 또는 활동을 사무총장 및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여하한 그러한 정보가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하한 당사국은 그 해저유물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협의할 이익이 있음을 사무총장에게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특히 관련 해저유물의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존중하여 입증 가능한 관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12조 심해저의 해저유물보호**

1. 이 조항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해저에 위치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2. The Director-General shall invite all States Parties which have declared an interest under Article 11, paragraph 4, to consult on how best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o appoint a State Party to coordinate such consultations as the Coordinating State. The Director-General shall also invite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o participate in such consultations.

3. All States Parties may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if necessary prior to consultations, to prevent any immediate danger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ether arising from human activity or any other cause including looting.

4.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 implement measures of protection which have been agreed by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mplement those measures; and

(b)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for such agreed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sulting States, which include the.

2. 사무총장은 해저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그리고 일 당사국을 그러한 협의에서 “조정국”으로 지명하기 위해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익을 선언한 모든 당사국을 초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국제해저기구를 그러한 협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협의 이전에, 약탈을 포함한 해저유물에 여하한 즉각적인 위험(인간 활동 또는 여하한 다른 원인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정국은:

(a)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에 의해 합의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조정국을 포함하는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보호조치들을 이행하여야한다고 합의한 것에 한한다; 그리고

(b) 이 협약과 일치하는 그러한 합의된 조치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조정국을 포함하



Coordinating State, agree that another State Party shall issue those authorizations.

5. The Coordinating State may conduct any necessary preliminary research on th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hall issue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therefor,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sults, who in turn shall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other States Parties.

6. In coordinating consultations, taking measures,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and/or issuing authoriz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ordinating State shall act for the benefit of humanity as a whole, on behalf of all States Parties. Particular regard shall be paid to the preferential rights of States of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origin in respect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7. No State Party shall undertake or authorize activities directed at State vessels and aircraft in the Area without the consent of the flag State.

### **Article 13 Sovereign immunity**

Warships and other government ships or

는 협의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에 한한다.

5. 조정국은 해저유물에 대한 여하한 필요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정보가 다른 당사국들로 하여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이 조에 따라 협의의 조정, 조치의 강구, 기초조사 그리고/또는 허가서 발급에 있어서, 조정국은 전체 인류의 이익과 모든 당사국을 대표하여 행하여야 한다. 관련 유산에 대해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에 특별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

7. 어느 당사국도 기국의 동의 없이는 심해저의 국가선박과 항공기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수행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 **제13조 주권면제**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며 그들의

military aircraft with sovereign immunity,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undertaking their normal mode of operations, and not engaged in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obliged to report discoveries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s 9,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However States Parties shall ensure,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not impairing the operations or operational capabilities of their warships or other government ships or military aircraft with sovereign immunity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at they comply, as 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with Articles 9,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Article 14 Control of entry into  
the territory, dealing and  
possess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ir territory, the dealing in, or the possess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llicitly exported and/or recovered, where recovery was contrary to this Convention.

통상 운용방식을 수행하며,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권면제의 군함 및 기타 정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는 이 협약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저유물의 발견을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주권면제의 자국 군함 또는 기타 정부선박 또는 군용 항공기의 운용이나 운용능력을 해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므로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한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입, 거래 및 점유의 규제**

당사국들은 해저유물의 불법 수출 그리고/또는 이 협약에 반하여 회수된 해저유물의 자국 영토 내로의 반입, 거래 또는 점유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rticle 15 Non-use of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prohibit the use of their territory, including their maritime ports, as well as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under their exclusive jurisdiction or control, in support of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rticle 16 Measures relating to nationals and vessel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nationals and vessels flying their flag do not engage in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a manner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rticle 17 Sanctions**

1. Each State Party shall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2. Sanctions applicable in respect of violations shall be adequate in severity to be effective in securing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o discourage

**제15조 당사국 관할 지역의 사용금지**

당사국들은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여하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국가의 해항과 더불어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또는 지배 아래 있는 인공섬, 시설물 및 구조물을 포함한 자국영토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민 및 선박에 관한 조치**

당사국들은 자국 국민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이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재**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2. 협약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는 이 협약을 확고하게 준수하는데 효과적이며, 어디에서 발생하는 위반이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그 엄중함에

violations wherever they occur and shall deprive offenders of the benefit deriving from their illegal activities.

3.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sure enforcement of sanctions imposed under this Article.

#### **Article 18 Seizure and dispos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ts territory that has been recovered in a manner no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record, protect and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stabiliz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eized under this Convention.

3. Each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Director-General and any other State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to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of any seizur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t it has made under this Convention.

있어 적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범죄자의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이 조에 부과된 제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해저유물의 압수와 처분**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이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회수된 해저유물의 압수를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 하에 압수된 해저유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록하고 보호하며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 하에 이뤄진 해저유물의 여하한 압수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당해 유산에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히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이 있는 여하한 기타 국가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A State Party which has seiz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ensure that its disposition be for the public benefit,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conservation and research; the need for reassembly of a dispersed collection; the need for public access, exhibi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rests of any State with a verifiable link, especially a cultural,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link, in respect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cerned.

#### **Article 19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and assist each other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 this Convention, including, where practicable, collaborating in the investigation, excavation, documentation, conservation, study and presentation of such heritage.

2.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concern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discovery of heritage, location of heritage, heritage excavated or recovered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pertinent

4. 해저유물을 압수한 일 당사국은 그 유산의 보존과 조사, 분산된 수집물의 재조합, 일반국민의 접근, 전시 및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저유물의 공익을 위한 처분을 보장하고, 당해 유산에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히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련이 있는 여하한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9조 협력 및 정보공유**

1. 당사국들은 이 협약 하에서 실행 가능한 경우 해저유물의 조사, 발굴, 문서화, 보존, 연구 및 발표에 있어서 협력을 포함하여 동 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각 당사국은 유산의 발견, 유산의 위치, 이 협약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회수된 유산,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과 기술 그리고 유산과 관련한 법적 개발을 포함한 해저유물과 관련하여 기타 당사국들과 정보공유를 한다.

scientific methodology and technology, and legal developments relating to such heritage.

3. Information shared between States Parties, or between UNESCO and States Parties, regarding the discovery or loc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be kept confidential and reserved to competent authorities of States Parties as long as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might endanger or otherwise put at risk the preservation of such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disseminate information, including where feasible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databases, abou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excavated or recovered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otherwi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Article 20 Public awareness**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raise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t under this Convention.

3. 해저유물의 발견 또는 위치에 관해 당사국들간 또는 UNESCO와 당사국들간에 공유된 정보는 자국 국내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유지하여 당사국의 소관기관에 보존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정보의 발표가 당해 해저유물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될 때에 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반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발굴 또는 회수한 해저유물에 대해 적절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절한 경우, 정보를 보급시키기 위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0조 대중인식**

각 당사국은 이 협약 하에서 해저유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rticle 21 Training in underwater archaeology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rovision of training in underwater archaeology, in techniques for th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on agreed terms,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Article 22 Competent authorities

1.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competent authorities or reinforce the existing ones where appropriate, with the aim of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updating of an invento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effectiv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research and education

2. States Parties shall communicate to the Director-General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relating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Article 23 Meetings of States Parties

1.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

## 제21조 수중고고학 훈련

당사국들은 해저유물에 대한 수중고학, 해저유물의 보존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함과 해저유물에 관한 기술의 이전에 관한 합의 조건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소관기관

1.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유물의 조사와 교육뿐만 아니라 해저유물의 목록의 작성, 유지 및 갱신, 해저유물의 효과적인 보호, 보존, 발표 및 관리를 위한 소관기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또 기존의 기관이 있는 곳에서는 적절히 개선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해저유물 관련 소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 당사국 회의

1.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발효 1년 이내

Meeting of States Parties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reafter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At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n Extraordinary Meeting of States Parties.

2.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decide on it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3.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may establish a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Body composed of expert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he desirability of a gender balance.

5.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Body shall appropriately assist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in questions of a scientific or technical natur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 **Article 24 Secretariat for this Convention**

1. The Director-Genera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for

와 그 후 최소한 매 2년에 1회씩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사국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임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당사국 회의는 자체 기능과 책임에 관해 결정한다.

3. 당사국 회의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 회의는 공평한 지역 안배와 바람직한 성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자문기구는 규칙서의 이행에 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질의에 대해 당사국 회의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 협약사무국**

1. 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위한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진다.



this Convention.

2. The duties of the Secretariat shall include:

(a) organizing Meetings of States Parti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23, paragraph 1; and

(b) assisting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s of the Meetings of States Parties.

#### **Article 25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s in good faith or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of their own choice.

2. If those negotiations do not settle the disput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t may be submitted to UNESCO for medi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3. If mediation is not undertaken or if there is no settlement by mediatio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set out in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2. 사무국의 의무는:

(a)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회의의 준비; 그리고

(b) 당사국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당사국 지원

#### **제25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국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은 신의성실로 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분쟁의 다른 평화적 수단으로 협상에 따라야 한다.

2. 그 협상이 합리적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관련 당사국들간의 합의로 UNESCO에 중개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3. 이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해 이 협약 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이 만일 중개를 선택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든 아니든

of the Sea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ether or not they are also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 Any procedure chosen by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ursuant to Article 287 of the latter shall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rticle, unless that State Party,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chooses another procedure pursuant to Article 287 for the purpose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vention.

5.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a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means set out in Article 287, paragraph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간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을 준용한다.

4. 이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선택한 분쟁해결 절차는 이 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당사국이 이 협약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이 협약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287조에 따라 다른 절차를 선택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이 협약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이 조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제1항에 규정된 수단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서면형식의 선언에 의하여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287조는 이러한 선언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국가가 당사자로서 행한 선언

the purpose of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rticle. Article 287 shall apply to such a declaration, as well as to any dispute to which such State is party, which is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For the purpose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es V and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u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nominate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to be included in the lists referred to in Annex V, Article 2, and Annex VII, Article 2,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vention.

**Article 26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Member States of UNESCO.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accession:

(a) by States that are not members of UNESCO but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r of a specialized agenc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or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by States Parties to

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하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및 제7부속서에 따른 조정 및 중재의 목적상, 상기 국가는 이 협약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5부속서 제2조 및 제7부속서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 포함되는 조정위원,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2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른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에 따른다.:

(a) 유네스코 회원국은 아니지만 UN 회원국이거나 UN체제 내의 특별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 그리고 유네스코 총회에 의해 이 협약에 가입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ny other State invited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b) by territories which enjoy full internal self-government, recognized as such by the United Nations, but have not attained full independence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4 (XV) and which have competence over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competence to enter into treati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 **Article 27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6,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twenty States or territories that have so deposited their instruments.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or territory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tate or territory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하도록 초청 받은 여하한 기타 국가

(b)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국내자치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있지만, 국제연합총회결의 제1514(XV)에 의한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 체결권을 포함한 권한을 가지는 영토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제27조 발효**

이 협약은 제26조에 따라 20번째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서를 기탁한 20개국 또는 영토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국가 또는 영토가 문건을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당해 국가 또는 영토 상호간에 발효한다.

## **Article 28 Declaration as to inland waters**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ny State or territory may declare that the Rules shall apply to inland waters not of a maritime character.

## **Article 29 Limitations to geographical scope**

At the time of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 State or territory may make a declaration to the depositary 3 that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specific parts of its territory,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or territorial sea, and shall identify therein the reasons for such declaration. Such Stat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as quickly as possible, promote conditions under which this Convention will apply to the areas specified in its declaration, and to that end shall also withdraw its declaration in whole or in part as soon as that has been achieved.

## **Article 30 Reservations**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29, no

## **제28조 내수면에 관한 선언**

여하한 국가 또는 영토는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해양 특성이 아닌 내수면에 대해 규칙서를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 **제29조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점에, 일 국가 또는 영토는 자국의 영토, 내수면, 내수, 군도수역 또는 영해의 특정한 부분에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음을 수탁자에게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이 협약이 그 선언에서 명시한 지역에 적용하고, 그리고 종국에 성취되는 대로 선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도록 조건들을 진척시켜야 한다.

## **제30조 유보**

제29조는 예외로 하고, 이 협약에는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 Article 31 Amendments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shall circulate such communication to all States Parties.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not less than one half of the States Parties reply favourably to th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shall present such proposal to the next Meeting of States Parties for discussion and possible adoption.

2. Amendment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3. Once adopted,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the States Parties.

4.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bu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hat have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m,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months

유보사항을 두지 않는다.

### 제31조 개정

1. 일 당사국은 서면통지문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므로서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런 통지문을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통지문의 회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제안에 대한 당사국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사무총장은 토의와 채택 가능성을 위해 다음 당사국 회의에 그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2/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 개정안은 당사국들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필요로 한다.

4. 개정안은 당사국 2/3에 의해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의 기탁 3개월 이후 개정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발효된다. 그 후에 개정 협약은 국가 또는 영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by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hereafter, for each State or territory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i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that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 A State or territory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failing an expression of different intention by that State or territory, be considered:

(a) a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s so amended; and

(b) as a Party to the unamended Convention in relation to any State Party not bound by the amendment.

## Article 32 Denunciation

1. A State Party may,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denounce this Convention.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unless the notification

토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3개월 이후에 개정안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 상호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조 제4항과 일치하는 개정 협약의 발효 이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일 국가 또는 영토는 다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그 국가 또는 영토는:

(a) 개정 협약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b) 개정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여하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 제32조 폐기통고

1. 일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 하므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a later date)를 명기하지 않는 한 통지의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갖는다.

specifies a later date.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unless the notification specifies a later date.

3. The denuncia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duty of any State Party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is Convention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is Convention.

### **Article 33 The Rules**

The Rules annexed to this Convention form an integral part of it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includes a reference to the Rules.

### **Article 34 Regist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2. 폐기는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a later date)를 명기하지 않는 한 통지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갖는다.

3. 폐기통고는 이 협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이 협약에 구현된 여하한 의무를 이행할 여하한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3조 규칙서**

이 협약에 부속된 규칙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상의 언급은 규칙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본다.

### **제34조 국제연합에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부합하여 이 협약은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Article 35 Authoritative texts**

This Convention has been drawn up in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six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제35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언어 본은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

## Annex

## Rules concerning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I. General principles

**Rule 1.**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rough in situ pre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s the first option. Accordingly,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authoriz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at heritage, and subject to that requirement may be authorized for the purpose of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tection or knowledge or enhanc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ule 2.**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or trade or speculation or its irretrievable dispersal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protection and proper managemen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be traded, sold, bought or bartered as commercial goods.

This Rule cannot be interpreted as preventing:

## 부속서

##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관한 규칙서

## I. 일반원칙

**규칙 1.** 원장소의 보존을 통한 해저유물의 보호는 최우선 조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그 유산의 보호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허가요청이 있으면 해저유물의 보호, 지식 또는 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규칙 2.** 해저유물의 거래 또는 투기를 위한 상업적 이용이나 회복할 수 없는 분산은 해저유물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에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해저유물은 상업적 재화로써 거래, 매매 또는 교환될 수 없다.

이 규칙은 다음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a)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or necessary services incidental thereto whose nature and purpose are in full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are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b) the deposi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covered in the course of a research project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provided such deposition does not prejudice the scientific or cultural interest or integrity of the recovered material or result in its irretrievable dispersal;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ules 33 and 34; and is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Rule 3.**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ore than is necessary for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Rule 4.**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ust use non-destructive techniques and survey methods in preference to recovery of objects. If excavation or recovery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studies or for the ultimat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a) 그의 성격이나 목적이 이 협약과 완전히 부합하며, 소관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전문 고고학적 서비스 또는 부수적인 필요 서비스의 제공.

(b) 이 협약과 일치하는 조사사업 과정에서 회수한 해저유물의 처분이 과학적 및 문화적 관심 또는 회수된 재료의 완전함을 해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분산을 초래하지 않으며 동 규칙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며 소관기관의 허가에 따르는 그러한 처분의 제공.

**규칙 3.**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사업목적의 필요 이상의 해저유물에 역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규칙 4.** 유물 회수에 앞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비파괴적 기술과 조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발굴 또는 회수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또는 해저유물의 궁극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가능한 비파괴적이어야 하며

cultural heritage, the methods and techniques used must be as non-destructive as possible an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remains.

**Rule 5.**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avoid the unnecessary disturbance of human remains or venerated sites.

**Rule 6.**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strictly regulated to ensure proper recording of cultur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nformation.

**Rule 7.** Public access to in situ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promoted, except where such access is incompatible with protection and management.

**Rule 8.**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duct of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encouraged in order to further the effective exchange or use of archaeologists and other relevant professionals.

## **II. Project design**

**Rule 9.** Prior to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 project design for the activity shall be develop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유물의 보존에 기여하여야 한다.

**규칙 5.**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인류유적이거나 유서 깊은 장소의 불필요한 교란을 피하여야 한다.

**규칙 6.**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문화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정보의 적절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규칙 7.** 해저유물의 보호와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을 제외하고 해저유물의 원장소로의 대중적 접근은 촉진되어야 한다.

**규칙 8.**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들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고고학자와 기타 관련 전문가의 좀 더 효과적인 교류 또는 활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 **II. 사업 계획**

**규칙 9.**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여하한 활동에 앞서, 그 활동에 대한 사업 계획이 개발되어야 하고 허가를 위해 소관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

for authorization and appropriate peer review.

세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ule 10.**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규칙 10.**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an evaluation of previous or preliminary studies;

(a) 사전 및 기초연구의 평가;

(b) the project statement and objectives;

(b) 사업보고서의 목적;

(c) the methodology to be used and the techniques to be employed;

(c) 사용될 방법론과 구사될 기술;

(d) the anticipated funding;

(d) 예상자금;

(e) an expected timetable for completion of the project;

(e) 사업완수를 위한 예상 시간계획;

(f) the composition of the team and th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d experience of each team member;

(f) 조사팀의 구성과 각 팀원의 자격, 책임 및 경력;

(g) plans for post-fieldwork analysis and other activities;

(g) 현지조사 활동 후의 분석과 기타 행동계획;

(h) a conservation programme for artefacts and the sit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h) 소관기관과 밀접한 협력에 의한 인공유물과 유적지의 보존 계획;

(i) a si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policy for the whole duration of the project;

(i) 전 사업 기간 동안의 유적지 관리 및 유지정책;

(j) a documentation programme;

(j) 문서화 계획;

- |  |   |
|--|---|
| (k) a safety policy;   | (k) 안전정책;                                 |
| (l) an environmental policy;   | (l) 환경정책;                                 |
| (m) arrangements for collaboration with museums and other institutions, in particular scientific institutions; | (m) 박물관과 타 기관, 특히 과학 관련 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약정; |
| (n) report preparation;  | (n) 보고서 준비;                               |
| (o) deposition of archives, inclu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 (o) 재 이전된 해저유물을 포함한 유물 보관소에 기탁;           |
| (p) a programme for publication.   | (p) 출판계획                                  |

**Rule 11.**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desig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규칙 11.**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들은 소관기관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Rule 12.** Where unexpected discoveries are made or circumstances change, the project design shall be reviewed and amend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규칙 12.** 예기치 못한 발견이 있거나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업계획은 소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Rule 13.** In cases of urgency or chance discoveries, activities directed a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onservation measures or activities for a period of short duration, in particular site stabilization, may be authorized in the absence of a project design in order to

**규칙 13.** 비상상황 또는 우연한 발견의 경우, 단기간 동안의 보존조치 또는 활동, 특히 유적지 안정을 포함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들은 해저유물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없이 허가될 수 있다.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III. Preliminary work

**Rule 14.** The preliminary work referred to in Rule 10 (a) shall include an assessment that evaluates the significance and vulnerabilit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to damage by the proposed project, and the potential to obtain data that would meet the project objectives.

**Rule 15.** The assessment shall also include background studies of availabl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the archae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the consequences of any potential intrusion for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ffected by the activities.

### IV. Project objective, methodology and techniques

**Rule 16.** The methodology shall comply with the project objectives, and the techniques employed shall be as non-intrusive as possible.

### III. 기초조사

**규칙 14.** 규칙 제10조 (a)호에 언급된 기초조사는 해저유물의 중요성, 취약성 및 신청사업에 의한 주변 자연환경의 피해, 사업목적에 충족시키는 자료를 획득할 잠재성과 같은 것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15.** 평가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와 유적지의 고고학적 및 환경적 특성, 활동들에 의해 영향받는 해저유물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여하한 잠재적 침입의 결과 등과 같은 배경연구를 포괄하여야 한다.

### IV. 사업목적, 방법론 및 기술

**규칙 16.** 방법론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술은 가능한 한 비침투적 방법이 구사되어야 한다.

**V. Funding**

**Rule 17.**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to protec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 adequate funding base shall be assured in advance of any activity, sufficient to complete all stages of the project design, including conservation, documentation and curation of recovered artefacts, and report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Rule 18.** The project design shall demonstrate an ability, such as by securing a bond, to fund the project through to completion.

**Rule 19.**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a contingency plan that will ensur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any interruption of anticipated funding.

**VI. Project duration - timetable**

**Rule 20.** An adequate timetable shall be developed to assure in advance of any activity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completion of all stages of the project design, including conservation, documentation and curation of recovere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V. 자금**

**규칙 17.**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상황은 제외하고, 적절한 자금기반은 인공유물의 보전, 문서화 및 학술적 관리와 보고서의 준비 및 배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여하한 활동에 앞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규칙 18.** 사업계획은 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같이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칙 19.** 사업계획에는 예상자금에 대한 여하한 중단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해저유물의 보전과 기록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VI. 사업기간 - 일정표**

**규칙 20.** 적절한 일정표는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여하한 활동에 앞서 보고서의 준비 및 배포와 같이 회수된 해저유물의 보전, 문서화 및 학술적 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report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Rule 21.** The project design shall include a contingency plan that will ensure con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in the event of any interrup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ject.

## **VII. Competence and qualifications**

**Rule 22.**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all only be undertaken und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and in the regular presence of, a qualified underwater archaeologist with scientific competence appropriate to the project.

**Rule 23.** All persons on the project team shall be qualified and have demonstrated competence appropriate to their roles in the project.

## **VIII. Conservation and site management**

**Rule 24.** The conservation programme shall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during th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during transit and in the long term. Conserv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urrent professional standards.

**규칙 21.** 사업계획은 여하한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해저유물의 보존과 문서화 지원을 확보하는 긴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VII. 자격과 자질**

**규칙 22.**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들은 사업에 적절한 과학적 자질을 지닌 자격있는 수중고고학자의 지도, 통제 및 정식참석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규칙 23.** 사업 구성원 모두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그 사업역할에 적절한 증명된 자격을 지녀야 한다.

## **VIII. 보존과 유적지 관리**

**규칙 24.** 보존계획은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하는 동안 수송 및 장기적 관점에서 고고학적 유물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Rule 25.** The site management programme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situ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course of and upon termination of fieldwork. The programme shall include public information, reasonable provision for site stabilization, monitoring, and protection against interference.

## **IX. Documentation**

**Rule 26.** The documentation programme shall set out thorough documentation including a progress report of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professional standards of archaeological documentation.

**Rule 27.**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a comprehensive record of the site, including the provenanc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moved or removed in the course of the activities directed at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field notes, plans, drawings, sections, and photographs or recording in other media.

## **X. Safety**

**Rule 28.** A safety policy shall be prepared that is adequate to ensure the

**규칙 25.** 유적지 관리계획은 해저유물에 대한 현장조사의 과정에서 종료까지 원장소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그 계획은 공공정보, 유적지 안정을 위한 합리적 규정, 불법방해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IX. 문서화**

**규칙 26.** 문서화 계획은 고고학적 문서화의 현행 전문기준에 따라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에 대해 경과 보고를 포함한 철저한 문서화가 이뤄져야 한다.

**규칙 27.** 문서화는 최소한 해저유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 과정에서 해저유물의 이동과 재 이전의 유래, 야장, 계획서, 도면, 단면도 그리고 사진 및 여타 매체의 기록을 포함하여 유적지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X. 안전**

**규칙 28.** 안전정책은 사업 구성원과 제3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여하

safety and health of the project team and third parties and that is in conformity with any applicable statutory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 **XI. Environment**

**Rule 29.** An environmental policy shall be prepared that is adequate to ensure that the seabed and marine life are not unduly disturbed.

## **XII. Reporting**

**Rule 30.** Interim and final reports shall be made available according to the timetable set out in the project design, and deposited in relevant public records.

**Rule 31.** Reports shall include:

- (a) an account of the objectives;
- (b) an account of the methods and techniques employed;
- (c) an account of the results achieved;
- (d) basic graphic and photographic documentation on all phases of the activity;
- (e) recommendations concerning conservation and curation of the site and of any

히 적용 가능한 법령과 전문적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XI. 환경**

**규칙 29.** 환경정책은 해저 및 해양생물이 부당하게 교란되지 않게 적절히 보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XII. 보고**

**규칙 30.** 임시 및 최종보고는 사업계획에 수립된 일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있는 공공 기록보관소에 기탁되어야 한다.

**규칙 3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 (a) 목적의 설명;
- (b) 사용된 방법과 기술의 설명;
- (c) 달성한 결과의 설명;
- (d) 활동 전반에 대한 기초적 그래프와 사진 문서;
- (e) 유적과 이전된 여하한 해저유물의 보존과 학술적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그리고

(f) recommendations for future  
activities.

(f) 향후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 **XIII. Curation of project archives**

**Rule 32.** Arrangements for curation of the project archives shall be agreed to before any activity commenc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project design.

**Rule 33.** The project archives, including 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emoved and a copy of all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as far as possible, be kept together and intact as a collection in a manner that is available for professional and public access as well as for the curation of the archives. This should be done as rapidly as possible and in any case not later than ten years from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so far as may be compatible with conserva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Rule 34.** The project archives shall be manag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professional standards, and subject to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 **XIII. 사업 기록물의 관리**

**규칙 32.** 사업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약정은 여하한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규칙 33.** 재이전된 여하한 해저유물 및 모든 지원 문서의 사본을 포함한 사업기록은 기록물의 관리와 같이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물로서 가능한한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해저유물의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사업 완수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어느 경우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보관되어야 한다.

**규칙 34.** 사업의 기록은 국제적 전문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소관기관의 허가에 따른다.

**XIV. Dissemination**

**Rule 35.** Projects shall provide for public education and popular presentation of the project results where appropriate.

**Rule 36.** A final synthesis of a project shall be:

(a) made public as soon as possible, having regard to the complexity of the project and the confidential or sensitiv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b) deposited in relevant public records.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Conven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hirty-first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hird day of November 2001.

IN WITNESS WHEREOF we have appended our signatures this 6th day of November 2001.

Done in Paris this 6th day of November 2001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XIV. 배포**

**규칙 35.** 사업은 적절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 대해 교육하고 대중에게 발표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36.** 사업의 최종 종합은:

(a) 사업의 복잡성 및 정보의 비밀 또는 민감한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b) 관련 공공기록으로서 기탁되어야 한다.

상기한 것은 2001년 파리에서 개최되어 월 11월3일 폐회된 UNESCO 제31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2001년 11월 6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했다.

2001년 11월 6일 파리에서 UNESCO 제31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을 얻은 2개의 정본은 UNESCO 문서국에 기탁될 것이며, 그 인정사본들은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and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6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제26조에 규정된 국가 및 영토들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다.

---

침몰선박 및 해저유물의 처리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2002年 11月 26日 印刷

2002年 11月 30日 發行

編輯兼

李 廷 旭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정인 I & D 3486-6791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